# 第243回國會 (定期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 10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3年11月4日(火)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4년도예산안(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

**審査된案件**

1. 2004년도예산안(계속) ····· 1
 가. 외교통상부소관

(10시03분 개의)

**○委員長 徐廷和**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0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1. 2004년도예산안(계속)

### 가. 외교통상부소관

**○委員長 徐廷和**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상부소관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 외교의 효과적 수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2004년도에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추구하면서 국력에 상응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한다는 목표하에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주어진 예산을 잘 활용하여 우리의 외교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우선 내년도 우리 외교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외교통상부는 우리 외교의 최우선 당면과제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참여정부의 외교부문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외교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미관계의 발전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개방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경제·통상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문화외교와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 동포사회 지원 노력에 더욱 힘써 국제사회에서 신망 받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신장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말에 개최된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하며 향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망을 밝게 해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6자회담 과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시키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미 및 한·미·일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외교장관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협의, 대북정책조정그룹 회의, 한·미·일 비공식 3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체 현안에 대한 조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및 EU와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남북 장관급회담 등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이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향적으로 임하도록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 외교통상부소관 과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및 외교적 기반 확충 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현안 핵심과제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동북아 협력 증진을 위한 호의적인 역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등 주요 양자회담 및 ASEM, APEC, ASEAN+3, ARF 등 다자회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중장기적으로 역내 정세를 안정화하고 평화정착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역내국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체의 수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분위기와 여건 조성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동북아협력대화 등 지역 차원의 다자포럼을 적극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교통상부는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해 동북아 경제협력 기반을 확충하는 등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역내 국가 간 무역, 투자, 에너지, 철도, 환경 등 제안 분야에서 공동협력 및 유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금년 10월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한·중·일 정상 간에 채택된 한·중·일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동북아 지역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국과의 관계 강화·발전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과는 2003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양국 간 포괄적·역동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초 미국으로부터 추가파병 요청을 받은 후 제반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 우리의 국익 확보,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 세계평화에의 기여 등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파병부대의 성격과 형태 그리고 규모와 시기 등은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국민여론, 현지조사단의 조사결과, 국군의 특성 및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일 관계는 월드컵의 공동개최와 금년 6월 대통령 국빈방일를 통해 다져진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실질협력관계 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일 간 공조를 강화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향후 6자회담을 계기로 북일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 북일 관계의 개선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국과는 금년 7월 대통령 국빈방중을 계기로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양국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0대 경제협력사업 및 청두(成都) 총영사관 개설, 영사 및 경제분야 조약 조속 체결 등 양국 간 교류협력을 제도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비핵화라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중국 내의 탈북자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러시아와는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TKR/TSR 연결사업과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 등 주요 실질협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한·러 상호이해 및 협력증진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 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국제경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외교통상부는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FTA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한·칠레FTA를 마무리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비준이 계속 지연될 경우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 저하,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 모멘텀 상실, 대외신인도 하락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금번 정기국회에서 한·칠레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경제적 타당성과 정치·외교적 협력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국들과의 FTA 체결을 본격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는 지난 10월 하순 APEC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싱가포르와는 국빈방문에서 각각 정부 간 FTA 공식협상을 선언하였으며, 금년 내지 내년 초에 걸쳐 정부 간 협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ASEAN과도 FTA 타당성 연구를 착실히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가 성과없이 끝났지만 다자 무역체제를 통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므로 DDA협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역자유화의 이익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개방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개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방의 이익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통상마찰의 사전 예방과 통상현안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통상마찰이 발생할 경우 원만한 해결 노력과 함께 WTO의 분쟁해결 절차도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진출과 수출 증진 및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경제사절단, 시장개척단 등을 계속해서 파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운영 중인 통상투자진흥 종합지원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원조 사업 확대를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개발원조 예산이 OECD 회원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受援國들과 원조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협조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신망 받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신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외교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ASEM, APEC, ASEAN+3,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등을 통하여 지역협력 외교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계화에 따라 범세계적 문제가 확대되면서 다자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점에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는 한편 제2차 민주주의 공동체회의 주최국으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산하는 데도 능동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국제사회 공동의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총회를 주최하는 등 기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자외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국제기구의 이사국 및 사무국 진출 확대를 통해 국제문제를 관리하는 경험과 지적 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도 국제기구의 고위직 진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다자무대에서 응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국력에 상응하는 재정적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제기구 분담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적 기여의 척도가 되는 자발적 분담금은 유엔 분담률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여력이 허락하는 대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지역화 경향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 간 협력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부응하여 ASEM, APEC, ASEAN+3,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등 지역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SEM은 아시아와 유럽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협력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협력의 장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차 ASEM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아시아와 유럽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ASEM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APEC은 우리나라 무역·투자의 최대 파트너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태 공동번영과 경제공동체의 구현이라는 APEC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최할 예정인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200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을 위한 유용한 협력의 장인 ASEAN+3에도 적극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도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비전을 제시하는 등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SEAN+3가 보다 제도화된 지역협력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은 1999년 출범한 이래 양 지역 간 협력의 장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서 2005년간 아시아 지역 조정국으로서 양 지역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문화는 국력의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외교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해외에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학 연구를 진흥하는 등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보다 적극적인 문화외교를 통해 문화국가로서의 우리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우리 예술작품의 해외공연을 지원하고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를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공간화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효과적 홍보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공동위원회 개최 등 양자 차원의 문화교류 협력과 아울러 UNESCO 등을 통한 다자 차원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교통상부는 재외 국민의 보호와 재외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영사민원 서비스 수요확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영사업무 인력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IT시대에 부응하는 영사민원 업무체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9·11 테러사태 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출입국

관리 통제와 여권 및 사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감안하여 우리의 여권 및 사증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600만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거주국 내에서 모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문화 전파 등 각종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동포의 한민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계韓商대회 등과 같이 전 세계 한민족을 네트워크화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은 물론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金德龍 委員** 작은 것이지만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600만 재외동포 그랬는데 지난번 외교부 집계를 보니까 607만 얼마로 나와 있고 그 통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즉 일본 국적을 가진 귀화한 동포는 뺐더라구요. 그래서 그 숫자를 합하면 630만, 640만이 되는데 과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흔히들 이렇게 숫자가 600만을 훨씬 넘었는데 600만이라는 일반적 수치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정확히 하면 650만이라고 하든지 한 700만이라고 하든지 그래야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00만이라고 하는데 이주도 하고 그래서 연간 증가하는 재외동포 수도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한을 합쳐서 7000만을 넘어서고 있고 그래서 7000만에 700만 이렇게 한다든가, 숫자를 밝힐 때 통칭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최근 숫자를 잡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德龍 委員** 다시 한번 내 보시고 증가추세도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외교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외교·통상 역량의 강화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직위분류제에 기반한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2년여간 실행해 왔으며 앞으로는 동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이러한 신 외무인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본부 및 재외공관의 홈페이지를 확충 개선하는 등 대국민 정보 제공 및 민원 서비스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범국민적인 이해와 성원하에 외교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외교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안으로서 세출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1%가 증가한 7756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 이라크 재건지원 경비 600억 원을 포함한 추경예산 대비 시는 2.2% 증가한 액수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2.3%가 증가한 724억 15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보내 주신 외교통상부와 외교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거듭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2004년도 외교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외교통상부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4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안개요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徐廷和** 기획관리실장은 보고할 때 장관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언급했다는 것 아시지요?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안) 사업별 내역부터 시작하세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 예산(안)개요 중 2004년도 예산안의 사업별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총 724억 15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645억 1100만 원 대비 12.3%가 증액된 액수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증가추세를 감안 여권 발급 및 영사업무 수수료 예상수입액이 2003년 603억 1700만 원에서 2004년 700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金德龍 委員** 재산수입 2억 5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재산수입은 국

유재산 매각대금 플러스 이자수입 이런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의 성질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개 신규사업과 56개 계속사업 등 총 65개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별·세항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예산은 외교통상 지원, 외교활동, 재외국민영사, 통상교섭 및 경제활동, 재외공관 운영, 외교연구, 대외협력의 총 7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문별 예산 증감 내역은 자료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 지원항은 본부 인건비,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공보관실, 총무과 등의 운영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4년도 예산은 730억 4000만 원으로 2003년 대비 2.4%인 18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유는 성과지표 개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신청사 입주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金鍾河 委員** 대통령이 외국 방문할 때 그 비용이 외교부에 책정된 것이 있어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내년도 예산에 100억 가까이 책정되었습니다.

**○金鍾河 委員** 어느 항목에 넣은 거예요? 대통령 해외방문 명목이에요, 다른 명목이에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정상회의 참가로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金鍾河 委員** 그러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 정상외교만 외교부 예산으로 하고, 대통령의 해외방문 비용이 몇 군데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통상 그동안 모든 정상회의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이유는 정상회의 일정이나 수행원 규모, 성격에 따라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비비로 책정해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있는 예를 들어 APEC 정상회의나 ASEAN+3 정상회의 이런 예측이 가능한 정상회의 예산을 금년도에 100억 정도 일반예산에 편성했습니다.

**○金鍾河 委員**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비비로 안 하고 정식으로 일반예산에 넣었다는 말이지요? 작년까지는 안 넣은 것 아닙니까?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예, 그렇습니다.

**○曺雄奎 委員** 기획관리실장, 자료에 보면 계속사업 마지막에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민단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이 항시 포함됐었지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예, 그렇습니다.

**○曺雄奎 委員** 지금 이것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포함 안 시킨 금액이에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지금 현재는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曺雄奎 委員** 우리가 국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었습니다. 민단에 지원하는 80여억 원을 재외동포재단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러모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꼭 민단에 지원할 정부 방침이라면 외교부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뭐예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단지원 예산을 외교부 본부 예산으로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민단지원금을 외교부 예산으로 이관했을 때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가능하면 재단으로 일원화하는 노력에는 다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 측 의견은 민단지원 예산을 일부 정책적 지원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해서 정책지원사업은 외교부 본부 예산으로 이관하고 일반사업은 재단 예산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曺雄奎 委員** 재외동포의 정의가 외국국적을 소지한 사람들 혹은 외국에 영주하는 사람들만 포함하는 것인지 재외국민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재외동포재단의 설립취지는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외국에 영주하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 민단의 구성원은 주로 재외국민입니다. 한국국적을 고수하는 분들이에요. 재외동포재단에서 정책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볼 때 지금 민단에 팔십몇억이 가지 않습니까?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8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曺雄奎 委員**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가거든요. 그런데 60만 재일동포와 기타 지역에 있는 거의 500만, 600만에 가까운 동포를 대상으로 할 때 한 쪽에 그렇게 예산을 편중하는 것이 과연 재외동포재단의 이미지라든가 위상강화에 좋은지, 다른 지역 동포들의 불만이나 반발은 어떻게 무마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동포재단의 정책추진에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요인들이 작용한다면 이것은 재외동포재단 설립취지하고도 어긋나거든요.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민단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해도, 그것은 재일동포들만 주장하는 얘기이고 타 지역에 있는 동포들은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동포재단이 제의를 하려면 예산부터 뭔가 균형감각이 있어 가지고 동포들이 볼 때 적은 액수지만 우리 동포를 위해서 재외동포재단이 수고한다 이런 인식을 주어야 앞으로 협조도 얻고 동포재단도 성과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부작용이나 불만 같은 것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니까…… 알았어요.

앞으로 정책사업하고 무슨 기타사업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600만을 대상으로 형평성 있는 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金德龍 委員** 曺 실장!

지금 답변 중에 '어느 경우도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짜는 예산부터 민단지원예산을 본부예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내년예산부터 예산편성을 바꾸는 것은 예산편성 기술상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동포재단 측에서 지금 우려하는 바는 민단예산이 동포재단예산의 약 3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민단예산지원금 84억이 나갔을 때 또 동포재단예산이 너무 급격히 축소되는데 이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외동포정책의 후퇴로 인식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동포재단 의견으로는 정책지원사업하고 일반사업을 구분해서 이관을 했으면……

**○金德龍 委員** 그 얘기는 알겠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래도 괜찮다면 이번 예산부터 동포재단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민단지원금을 바로 본부예산으로 돌리는 이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예, 문제는 없습니다.

**○金德龍 委員** 알았어요.

**○曺雄奎 委員** 어쨌든 돌려놓고 동포재단예산이 적게 보이면 좀 추가시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보전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허락해 주시면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徐廷和** 보고하세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다음은 외교활동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활동항은 의전장실, 외교정책실, 5개 지역국, 조약국, 문화외교국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총 326억 4400만 원으로 2003년 대비 41.3%인 95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정상회의 참가, 2004년도 미사일기술통제체제총회 개최, 인권증진을 위한 선정의 실천세미나, 서남아대양주지역 국가와의 파트너십 강화, 대통령 남미순방계기 특별사업 등 5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109억 3500만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외국민영사 분야 예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실장!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예.

**○이인제 위원** 정상회의 예산이 100억인가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100억입니다.

**○이인제 위원** 하나 좀 물어봅시다.

전용기에다 몇백 명씩 태우고 정상외교 펼치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다음에 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제 경험으로는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러시아……

**○이인제 위원** 일본도 전용기에 몇백 명씩 태우고 다닙니까?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일본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전용기 두 대가 주로 다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인제 위원** 정상외교를 짜임새 있게 실용적으로 해야지요. 냉전시대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주로 경제·실리 외교 아닙니까? 보기에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의 간소화 문제를 저희들이 담당 의전장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容甲 委員**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이광요 수상이 있을 때는 상당히 정상외교 대신 실무외교를 하고 인원수도 줄이고 그랬는데, 이번에 盧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방문 안 했습니까?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방문하셨습니다.

**○金容甲 委員** 방문해서 싱가포르의 좋은 점도 많이 배웠겠네요. 아까 이인제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이런 스타일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예,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예.

**○孟亨奎 委員** 유럽 선진국이나 이런 데 보면 단출하게 가방 하나 들고 몇 사람이 정상회의 다니지 않습니까? 옛날 5공 시절을 보면, 제가 그때 영국 특파원 할 때인데 全斗煥 대통령이 올 때 수백 명이 왔습니다. 재벌그룹 회장들, 그 나이 먹은 양반들이 공항 땅바닥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가방을 까고 세관검사를 받고 하는 그런 아주 보기 흉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마침 아프리카의 어느 대통령이 영국에 왔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사실은 외국에서 보면 대단히 창피한 일입니다. 우르르 몰려가고 경호원 몇백 명씩 가고 기업인들 데리고 가고, 언론인들이야 따라가는 것이고요. 취재하러 가는 것이지만 불필요하게 사회단체장들, 공무원들 우 데려가는 것이…… 이것 앞으로 좀 선진화시켜야 될 대상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께서도 그쪽으로 건의를 하시고 좀 세련되게 선진화된 정상외교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河 委員** 아주 지적을 잘 했습니다. 요즘 대선자금 기업인들한테 손 벌리는…… 기업인 데려가는 것은 전부 여비 뜯는 거예요. 그것 全斗煥 대통령부터 시작한 것인데, 아프리카 미개국은 잠재 쿠데타 세력을 몽땅 싣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아프리카가 그렇다고요. 어느 아프리카는 해외여행 중에 쿠데타가 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은 쿠데타가 날 염려는 없는데 기업인들 몇십 명 끌고 다니니까, 말은 세일즈 정상회담이다 하지만 모양도 안 좋을 뿐 아니라…… 기업인들 돈을 왜 쓰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갈 때 한 번 끼려고 돈 얼마씩 내는지 아세요? 소문 나 있는 것…… 그런 것은 진짜 없애야 됩니다. 외교부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정상회담답게 품위 있게, 이제는 선진국답게 하라는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세요.

**○河舜鳳 委員** 정상회의 참가 명목으로 100억이 넘게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세항목을 좀 제출해 주세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河舜鳳 委員** 신규사업에서 대통령 남미순방계기 특별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대통령 남미순방계기 특별사업 내용은 내년 11월 칠레 개최 APEC 정상회의 때 대통령 중남미순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순방과 관련해서 한국상품종합전시회 개최 그리고 경제통상 주요현안 타결을 위한 대표단 파견 등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한 주변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품 진출을 위한 상품전시회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특별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河舜鳳 委員**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세항을 주세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자세한 내용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徐廷和** 실장, 보고하세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다음은 재외국민영사 예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외국민영사 분야 예산액은 2003년 대비 28.3%인 5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증가추세에 따라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경비가 200억 8800만 원으로 2003년 대비 50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 확충 차원에서 재외국민 보호 및 순회 영사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 1억 1200만 원이 추가되었으며 여권사진 전사시스템사업 예산 4억 52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통상교섭 및 경제활동 예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 운영 및 사업예산인 통상교섭 및 경제활동 예산은 총 105억 2800만 원으로 2003년 대비 17%인 15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운영, APEC회의 대비 정책연구 및 홍보 등 200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관련 예산 15억 97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고 WTO 분쟁 대응 및 WTO 도하개발 아젠다 대응사업에 총 2억 6800만 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외공관 운영예산입니다.

128개 재외공관의 운영과 재외공무원 인건비예산이 포함된 재외공관 운영예산은 3345억 8600만 원으로 2003년 대비 3.6%인 116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외공무원 인건비 58억 원 증액, 재외공관 운영을 위한 기본사업비 31억 원 증액 그리고 재외공관국유화 원리금 상환액 28억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曺雄奎 委員** 잠깐만요.

金大中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떤 이유든 간에, 개혁적인 차원인지 몰라도 우리 공관을 많이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때 총영사관이 폐쇄된 곳이 몇 곳이지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22개가 폐쇄되었습니다.

**○曺雄奎 委員** 다시 복구된 것이 몇 군데예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그 이후 복구와 신설을 포함해서 6개입니다.

**○曺雄奎 委員** 앞으로 계속 필요에 의해서 총영사관을 복구한다든가 신설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저희들이 우선순위별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전체 조직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曺雄奎 委員** 그런 것이 이번 예산에는 포함 안 되었지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청두 총영사관 개설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曺雄奎 委員** 이번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못 오고 국무장관이 와서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나기 전에 외교부에다 플로리다와 우리 국가 간에 현안이 있으면 참고할 테니 알려달라고 하니까 실무진이 우리 비서들에게 꼬치꼬치 왜 만나느냐, 누가 만나자고 그랬느냐고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했대요. 그런 것은 잘 좀 훈련을 시키세요. 상임위의 한 일원이 미국 주의 대표되는 분하고 얘기할 때 양국 간에 현안이 있으면 좀 알고 가야 대화가 되는데 담당직원이 얼마나 꼬치꼬치 묻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있는 것 주면되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거예요.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플로리다가 미국에서 인구로는 네 번째로 크고 생산액으로는 다섯 번째로 큰 어마어마한 주이고, IT산업이라든가 투어리즘 해 가지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자기들은 중남미의 허브로 발전할 계획을 갖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남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마이애미 총영사관실의 덕을 얼마나 보았는지 몰라요. 금융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 투자도 그런데 그때 그것을 철수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 아까운 것 철수한다 하면서 그때 내가 신설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고 폐쇄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것이 다 나오던데 왜 그런 낭비적인 일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하나……

그런데 지금 그 필요성이 더 증대되었습니다. 마이애미에 갖고 있던 총영사관은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 투자하고 무역관계를 갖고 진출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총영사관이 있음으로써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지원센터가 될 텐데 그것을 없애버려서 그 지

역 교민들의 불만도 많고 비자를 받으려면 애틀랜타까지 연결을 해야 되고…… 특히 플로리다주 자체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주이고 중남미의 하나의 센터로, 주 자체가 그런 목표로 정책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로서도 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도 빨리 총영사관 하나 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97년도 말에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정부에서 전체 정부부처의 인력조정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후에도 한국의 국력신장이라든지 대외 외교영사활동이 급증되고 있기 때문에 복구와 개설을 지금 저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曺雄奎 委員** 우리가 협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나는 외교인력을 정년되었다고 퇴출하는 것도 국가적인 낭비라고 봐요. 나는 경제 못지않게 외교가 국력을 신장하고 국위를 선양하는 두 개의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활동은 강화하고 외교인력, 그렇게 훈련받고 유능한 인재들이 왜 그렇게 일찍이 정부를 떠나야 되는지, 법을 바꾸어서라도 경험 있고 경륜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계속 외교적인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니까 안들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金雲龍 委員** 다녀보면 세계도 달라지고 우리 국력도 달라지고 활동이 굉장히 넓어지고 소요가 많은데 공관이 없어져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야 지원을 하겠지만 강력하게 해서 늘렸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로 지난번에 이번에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된 분이 수상 때 태권도센터를 개관한다고 해서 나는 별로 그렇게 안 되는 나라인 줄 알고 갔는데 기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른 나라도 다 들어와 있고 한국하고도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로 분위기도 발칸지역의 맹주 비슷하게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데에 공관 설치하면 그 일대, 이라크도 거기 통해서 들어가고 이란도 들어가고 해서 그 일대가 상당히 좋던데 그런 개척할 수 있는 데, 불안하지 않은 데에 공관을 증설하면 좋겠어요.

**○金容甲 委員** 이 항에 관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매년 국정감사를 가다보면 국정감사 위원들이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재외공관의 외교활동비라든가 운영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국정감사를 하면 피감기관에 아무런 부담을 안 주지만 해외에 가면 일체를 거기에 다 맡겨야 됩니다. 공관에서 안내하는 대로 또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본부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또 하나는 경유지가 되었을 때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라마다 갈 때 준비하는 쪽에서 상당히 의견이 다른 형태가 생기는 것을 보았는데 경유지에도 정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안 해 주면 위원들의 여비에서 충당해야 된다든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때마다 고민하는데 어떻습니까?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위원님들이 국정감사를 나가실 때 경유지에도 저희들이 편의제공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별도 예산지원은 각 공관에서 갖고 있는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히 필요한 예산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각 공관별로 이런 불편이 계셨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金容甲 委員** 체계를 잡아야 되겠어요. 어떤 경유지에서는 본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부담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떤 공관에 가면 밥 한 끼도 우리가 다 사야 되는 입장인데 어느 쪽이 맞는지 몰라 가지고, 그것은 위원들이 거기서 신세를 지려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라고 하면 우리도 충분히 여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든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孟亨奎 委員** 존경하는 金容甲 선배님 말씀 듣다보니까 마치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나가서 공관에 얻어먹고 다니는 것 비슷한 오해를 다른 분들한테 줄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석전문위원이 저기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가지고 나가서 자체적으로 거의 다 해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관에서 대사가 밥을 댁으로 초청해서 낸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 이외에 특별하게 신세지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록으로 제가 남겨 두겠습니다.

**○金雲龍 委員** 얘기 나온 김에 공관의 복지관계

인데 사우디에 가서 감사를 했는데 거기 위층이 인원이 줄어서 비었던데 거기는 뜨거워서 밖에서 운동을 할 수도 없고 테니스장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헬스, 워킹머신 두 대하고 자전거 두 대, 아령 갖다 놓으면 공관원들이 운동하고 좋지 않느냐고 했더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사우디 하나 뿐 아니고 이제는 복지, 건강 이것이 21세기는 상당히 필요한 시대인데 우리 공관도 환경을 선진화해서 체력이 괜찮은 방향으로, 사우디뿐 아니고 사우디부터 그렇게 연구 좀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워킹머신 하나에 100만 원밖에 안하는데 할 수 있는 데부터 연구 좀 해 보세요.

**○金鍾河 委員**　그것 좀 하세요. 우리가 돌아보고 회관 빈자리에, 밖으로 못 다니니까 우리 감사반이 그것을 건의한다고 약속을 하고 왔으니까 꼭 지키도록 하세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다음은 외교안보연구원 운영예산인 외교연구 예산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교연구예산은 153억 30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9.2%인 24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외교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교정보센터 즉 외교사료관입니다. 건립예산이 금년보다 19억 5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예산입니다.

국제기구분담금,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재외동포재단 출연 예산으로 구성된 대외협력예산은 2003년 대비 4.1%, 121억 8800만 원이 감액된 2846억 74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2003년도 추경예산 이라크 재건 지원 600억 원을 제외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시에는 20.2%, 478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외교통상부 전체 예산의 약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중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은 1423억 2400만 원으로 2003년 대비 17.6%인 212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개도국 공적개발원조 즉 ODA 사업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은 2003년 추경예산에 대비할 때 22.8%, 349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183억 8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2003년도 본예산 대비 시에는 26.9%, 250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개도국 지원 및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720명의 청년봉사단 신규파견예산 222억 원이 증액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외동포재단 출연금은 2003년 대비 1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총 239억 70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대외협력예산이 이와 같이 2003년도 본예산 대비 시 증액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상응하는 기여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협력비가 향후 수년간 계속 증가추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재외공관청사 및 관저의 국유화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2003년 대비 8.4%가 감액된 502억 8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주중국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주독일대사관 청사 신축, 주러시아대사관 관저 신축 등 3개의 계속사업과 함께 주제네바대표부 관저 신축, 주삿포로총영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주독일대사관 관저 신축, 주이태리대사관 관저 매입 등 4개의 신규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외교통상부소관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徐廷和**　수고하셨어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세요.

**○首席專門委員 姜長錫**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마는 분량이 많아서 요약보고서를 통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부분입니다.

2004회계연도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올리면, 세입부문에서는 매년 수납실적이 세입예산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를 현실화하지 않고 있는 수입대체경비 수입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외교통상부 본부의 18개 실·국을 비롯해서 52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요약보고서에서는 그 중에서 예산의 증감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에서 수입대체경비 수입의 과소계상 문제입니다.

외교통상부 세입예산안의 97%를 차지하는 규모인 여권 및 사증발급수수료 수입대체경비 수입은 2003년도 대비 16.1%에 해당하는 96억 8300

만 원이 증액된 70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최근 3년간 수수료 징수실적이 매년 과도한 초과수납률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2004년도에 700억 원으로 편성된 것은 비록 전년 대비 16%가 증액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현실화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입대체경비 수입의 과소계상은 세입에 비례하지 않은 세출예산의 과소계상으로 이어짐으로써 세입초과수납분 지출을 야기하고 이러한 국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는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수납실적과 세입예산 간의 괴리를 줄여서 현실화된 세입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의 경우에는 세입예산액이 503억 책정되어 있고 실제 수납액은 851억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4회계연도 외교통상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2.2%에 해당하는 16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7756억 5100만 원으로 정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 117조 5429억 원의 0.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 본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정원초과 운영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문제입니다.

내년도 외교통상부 전체 인건비는 전년 대비 5.2%가 증액된 1729억 9700만 원으로 금년 9월 30일 현재 외교통상부 정원은 1533명이나 현원은 1577명으로 44명이 초과되어 있고, 정원 외로 인정되는 별도정원이 현재 127명 있으나 2004년도 예산안에는 96명만이 인정되어 있어 31명이 초과되어 있는 등 총 75명이나 초과되고 있으므로 전년도와 같은 대규모의 인건비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孟亨奎 委員** 계산하다가 조금 지나갔는데요. 2004년도의 여권 및 사증발급 수수료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몇%, 그러니까 16.1%가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과소계상되었다는 얘기가 여기 없네요. 퍼센티지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首席專門委員 姜長錫** 예,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집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통상 70~80%만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계속, 우리가 100%는 예견 못 하더라도……

**○孟亨奎 委員**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왜 계속 과소계상을 하지요? 이유가 뭔가요? 장관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실무자가 얘기 좀 하시지요. 해마다 지적되면서 또 그렇게 했나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과소계상의 근본적 이유는 여권발급경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이 과소계상되기 때문입니다.

**○孟亨奎 委員**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충 예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외여행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따라서 여권수수료는 점점 더 수입이 많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예상해 가지고 최소한도 85~90%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과소계상 하는 이유를 납득을 잘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지금 말씀올린 것처럼 일단 여권발급이나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위한 관련 세출예산이 과소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초과수입이 납니다. 세입예산이 과소계상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경비를 지출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孟亨奎 委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출을 늘리지 않음으로써 외교부 전체 예산의 볼륨을 줄이느냐고, 말하자면 억지로 그렇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것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그렇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권발급경비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나가는 세출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이 필요한데 예산당국에서 주는 세출예산이 50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국 그 재원염출을 하는 것이 세입 과소계상된 데에서 초과수입이 난 것으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이렇게…… 결국 세출예산이 현실화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현실화시켰습니다.

**○孟亨奎 委員**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 선에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金德龍 委員**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지자체가 여권발급을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자체가 지출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업무를 위탁하는 것 자체만도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실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인데 경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현실화해서 최소경비만은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데, 외교부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매년 그런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저희들도 현실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사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경비가 인건비하고 인건비의 약 20%를 차지하는 부대경비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간접경비인 시설경비나 이런 것을 요청해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발급 건수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이나마 보조금을 계속 늘려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金德龍 委員** 보조금이 아니라 사실은 필요경비입니다. 직접경비인데, 이 직접경비만은 꼭 외교부가 책임지고 지출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큰 돈도 아닙니다. 큰 돈도 아니니까 외교부가 중앙부처로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金德龍 委員** 금년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首席專門委員 姜長錫**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건비 부족분은 다른 예산에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다른 사업예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있는 정원에 맞게 현원을 유지하거나 현실에 부합되는 정원이 책정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별도정원 127명도 예산상의 인원 96명 이하로 축소 운영해야 할 것이며 외교통상부 본부는 실무직원을 대체할 수 없는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에서 현재 129명씩이나 할애받아 운영하고 있는바 그 수를 대폭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과다한 비정규직 보수 편성문제입니다.

내년도 외교통상부의 비정규직 보수 예산액은 전년도 522억 6570만 원의 4.9%에 해당하는 25억 4995만 원이 증액된 548억 1564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용직 고용을 위한 20억 5826만 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월 평균 88명이나 채용하고 있는 일용직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도 14억 3000만 원의 43.9%에 해당하는 6억 2826만 원이나 증액시켜 편성한 것으로서 과다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는바 일용임금 편성예산 전반에 대한 조정과 삭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교활동비 운영 및 관리 문제입니다.

2004년도 외교활동비는 전년 대비 10억 1200만 원이 증가된 263억 6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외교활동비는 그 구체적인 편성 및 집행내역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특수한 예산이므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에도 그동안의 집행실태를 보면 여타 비목으로 전용되거나 국제관계자문대사의 활동지원경비로 월정액이 지급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외공관에서 허위의 외교활동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교활동비를 부당하게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예산집행 사례까지 발생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활동비의 부적정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집행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집행내역이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 외부에서 그 집행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감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교활동비의 총 규모를 규제하는 동시에 국제관계자문대사 활동비 등 외교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업들은 일반예산에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河舜鳳 委員** 외교활동비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까?

**○首席專門委員 姜長錫** 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舜鳳 委員** 외교활동비라는 항목 자체는 사실 예산의 집행을 세밀하게 관리감독 받기 어려운데 왜 이 항목을 외교활동비에 넣었어요?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세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독립적 항목으로 기획예산처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외교활동비에 포함시켜서 예산이 편성되어 왔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관계국과의 교섭과정이 보

안을 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교활동비로 지원해 왔고, 북한이탈주민 지원도 예측불허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까지는 예비비로 상당 부분을 받아 썼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일반예산으로 상당 부분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河舜鳳 委員** 내년부터는 별도 항목으로 떼겠습니까?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내년에 10억 정도가 별도 예산 항목으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河舜鳳 委員** 알았어요.

**○首席專門委員 姜長錫** 한미동맹 강화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국 해외경상이전 사업의 과다지불 문제입니다.

2004년도 중남미국 해외경상이전 사업비는 중남미 5개국 재건기금 IDB 기탁에 2억 4000만 원, Plan Columbia지원 IDB기탁사업에 2억 4000만 원, 한·중남미 협력기금 3억 원 등 총 7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다른 실·국의 해외경상이전 사업비와는 달리 달러화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원화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 5개국 재건기금 IDB기탁사업과 Plan Columbia지원 IDB기탁사업은 미주개발은행(IDB)과의 지원을 위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문서에 의해서 달러화로 명시하여 지원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구두로 연간 각각 20만 불씩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2003년도의 경우에는 당시 환율이 예산편성 당시의 기준환율 1200원을 크게 하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환율로 편성된 5억 2000만 원(각 2억 6000만 원씩 2건) 전액을 지불함으로써 당초 약정금액인 20만 불을 초과하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3만 6094불을 불필요하게 과다 집행한 것은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孟亨奎 委員**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首席專門委員 姜長錫** 간략하게 말씀 올리면, 표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에는 각 사업에 20만 불을 기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차익이 발생해서 1만 8047불을 추가로, 안 줘도 될 것을 줬다는 뜻입니다.

**○孟亨奎 委員**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首席專門委員 姜長錫** 내년도에는 한화로 각 2억 4000만 원 되겠습니다.

**○孟亨奎 委員** 중남미 5개국 재건기금의 경우 2002년도에는 20만 불을 지불하면 될 것을 20만 7026불, 2003년도에는 21만 8047불, 그러니까 지불하지 않아도 될 돈 몇만 불을 거저 줬다는 얘기네요?

**○首席專門委員 姜長錫**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孟亨奎 委員** 환차손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20만 불로 계약했다면 20만 불만 주면 되지 왜 몇만 불을 더 주는지, 이것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중남미국장 계세요? 설명 좀 해 보시지요. 납득이 안 가네요.

**○外交通商部中南美局長 申崇澈** 예산 총액이 원화로 잡혀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환율의 변동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孟亨奎 委員** 당연하지요. 그런데요?

**○外交通商部中南美局長 申崇澈** 그래서 그 관계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불할 때 당시의 환율을 적용함에 따라서 조금 초과되는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孟亨奎 委員** 아니, 중남미국장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어요?

**○外交通商部中南美局長 申崇澈** 그러나 원래 책정할 때 꼭 20만 불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孟亨奎 委員** 구두로 책정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20만 불만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外交通商部中南美局長 申崇澈** 그러나 예산 책정된 액수를 충실하게 지불……

**○孟亨奎 委員** 예산 책정은 우리 국내 문제이고 그것을 중남미하고 같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의 논리대로라면 21만 8047불을 줄 수도 있지만 1만 8000불 줘도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만약 환차익이 생기지 않고 환차손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外交通商部中南美局長 申崇澈** 환차손이 생기면 환차손 생기는 액수만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孟亨奎 委員**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 20만 불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면 되는 거지요?

**○外交通商部中南美局長 申崇澈** 예, 그쪽에서는 만족할 수준이지요.

**○孟亨奎 委員** 아니,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 20

만 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外交通商部中南美局長 申崇澈** 그렇습니다.

**○孟亨奎 委員** 그런데 예산책정이 얼마가 되었다고 해서 환차이익이 난 것을 그냥 다 줘버려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부자입니까? 나는 공무원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外交通商部中南美局長 申崇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만 불만 딱 주기로 약정된 것은 아니고 20만 불을 조금 상회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孟亨奎 委員**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外交通商部中南美局長 申崇澈** 20만 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孟亨奎 委員** 그 얘기는 20만 불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20만 불 정도면 19만 불을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국내 예산이 이렇게 얼마가 잡혀 있다고 해서 남는 것을 다 주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행정편의에 의해서 내 돈이냐, 네 돈이냐 하고 주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外交通商部中南美局長 申崇澈** 그것보다는 중남미지역과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孟亨奎 委員**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20만 불 주면 될 것을 23만 불을 주고 나서 국가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또 중남미와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주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外交通商部中南美局長 申崇澈** 내년부터는 집행에 주의하겠습니다.

**○孟亨奎 委員** 이것은 국고로 환수하든지 불용액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유엔분담금 같은 것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쪽으로 돌려서 주든지 이렇게 써야지 무슨 돈이 많다고 남는 돈을 그냥 줘버려요! 그러고서는 국내 예산이 어떻게 잡혀서 그냥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인제 위원** 국장! 전문위원의 이야기는 달러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원화로 편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달러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外交通商部中南美局長 申崇澈**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미 5개국 지원사업은 달러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의 경제위기에 따라서 환율변경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원화로 책정하는 것은 나중에 달러를 미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원화로 다시 바꿨습니다. 콜롬비아 플랜 사업의 경우에는 달러화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화로 바꾼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 구두로 약속을 했든 문서로 했든 20만 달러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만 달러면 20만 달러이지 국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당히 주면 되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약속은 문서로 했든 구두로 했든 20만 달러면 20만 달러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달러로 안 하고 원화로 했냐는 말이에요.

**○外交通商部中南美局長 申崇澈**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에는 중미 5개국 재건지원신탁기금을 달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미 5개국 지원사업이 있고 다른 하나는 플랜 콜롬비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지금 문제된 플랜 콜롬비아를 이야기하라니까요.

**○外交通商部中南美局長 申崇澈** 그것을 원화로 한 것은 집행과정에서 원화와 달러의 환율이 급격히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정부에 예상치 않은 재정부담을 초래하게 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플랜 콜롬비아 지원사업은 원화로 지원하기로 결정해서 원화로 책정했습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예를 들어 그쪽에 20만 불이 아니라 19만불 그런 식으로 부족하게 준 경우도 있습니까?

**○外交通商部中南美局長 申崇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부족하게 준 경우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孟亨奎 委員** 외교부에 감사관이 계시지요? 나오셨어요?

**○外交通商部監査官 朴聖雄** 예.

**○孟亨奎 委員** 이것은 분명히 감사에서의 지적거리인데 이런 것은 감사 안 합니까?

**○이인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원화가치가 떨어져서 오히려 우리 예산 가지고 20만 달러를 환전을 못할 경우에는 예비비라도 들여서 20만 달러를 채워서 줘야 되고, 원화가치가 높아져서 예산 가지고 달러를 사 보니까 23만 달러를 살 수 있다 그러면 3만 달러는 불용으로 하고 20만 달러만 달러로 바꿔서 주면 되지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네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河舜鳳 委員** 콜롬비아 지원 IDB 기탁, 당초에 이 기금에 기탁하는 것 아닙니까?

**○外交通商部中南美局長 申崇澈** 그렇습니다.

**○河舜鳳 委員** 우리 정부가 20만 불을 기탁하기로 구두로든지 서류로든지 약정한 것 아닙니까?

**○外交通商部中南美局長 申崇澈** 그렇습니다.

**○河舜鳳 委員** 그러면 20만 불 주면 되지 왜 여기다가 원화로 계상해요?

**○이인제 위원** 예산을 처음부터 달러로 계상하든지, 원화로 했으면 환차손이 나든 환차이익이 나든 정산해서 20만 달러만 나중에 주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어린 아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金容甲 委員** 이것이 작년에만 한 것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한 모양이지?

**○外交通商部中南美局長 申崇澈** 콜롬비아협력기금에 대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에 보면 한국 원화로 2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달러화 금액을 기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에 책정했고 그에 상당하는 달러화 금액이니까 그때 환율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孟亨奎 委員**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더 지적하기가 그런데 공무원들의 정신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아주 소중한 예산인데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막 줘버립니다. 자기 돈이라면 아마 이렇게 안 쓸 것입니다. 이것은 안 줄 수 있는 돈을 줘버린 것입니다. 안 써도 되는 예산을 버린 것이라고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시고 누가 이런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책임추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首席專門委員 姜長錫**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러시아대사관 전문가 고용사업은 지난번 국감에서 현지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현지 러시아대사관은 2명의 경제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체 예산을 쓰지 않고 본부 예산을 편법 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간예술단체 해외공연 지원 부분입니다.

내년도 민간예술단체 해외공연지원사업비는 전년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단 파견사업은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와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재외동포재단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부처 간 협의는 물론이고 재외동포재단 및 국제교류재단 등 외교통상부 소관 내에서라도 먼저 사업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연합뉴스 수신사업의 재평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APEC정상회의 준비입니다.

외교통상부는 2005년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예정인 제13차 APEC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등 각급회의 개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자통상국에서 '2005년 APEC회의 대비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와는 별도로 금년 8월 설치된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해 13억 4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회의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회의 주제 및 부제 개발, 학계·경제계 의견 수렴 등 회의 실질내용과 정책에 관련되는 업무는 다자통상국이 담당하고, 개최장소 선정, 회의 및 각종 행사준비, 숙소, 교통 등 하드웨어 측면의 행정지원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조직으로 준비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5년 APEC회의 대비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은 2005년 APEC의 각급회의에 상정될 주제 및 제안사업 등을 연구·개발하고 대국민홍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나, 일용임금 3100만 원은 준비기획단에도 3억 5700만 원이나 계상되어 있는 등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반경비가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며, APEC 준비기획단 운영사업비는 2004년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는 시기임에도 3억 5400만 원에 달하는 일용임금을 편성하였고, 22인으

로 구성될 준비기획단의 차량 임차료가 승용차 3대에 8800만 원이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등 제반경비가 두 부서에 중복·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河舜鳳 委員** 기획실장! 국회 전문위원의 보고가 여러 가지로 객관적인 평가가 있겠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사업도 시작하지 않은 시기에 3억 5400만 원을 일용임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기획단이 발족되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河舜鳳 委員** 기획단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용임금이 필요합니까?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단에 일용임금을 받는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까?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지금 관계 공무원 직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실무직원 보충을 위해서 일용직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舜鳳 委員** 무슨 소리예요? 기획단운영사업비에 기존의 정규직원이 아니고 일용임금직이 들어가야 됩니까?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2004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일용임금에 반영된 사무원 6인, 영문 에디터 6인, IT전문가 3인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무보조원 6인은 정상회의 및 각종 회의 행사에 대비한 문서 및 자료를 생산, 처리하는 각 부별 직원의 업무보조원 4명과 외부출입자 안내, 리셉TU니스트 전화교환원 1인, 비서업무 수행 1인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부처로부터 이러한 인원을 파견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을 고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河舜鳳 委員** 2년 전부터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2년 전은 아닙니다. 이번에 발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河舜鳳 委員** 국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세부항목별로 따져보겠지만 지나치게 예산을 의도적으로 방만하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委員長 徐廷和** 나중에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姜長錫** 간략하게 제목만 읽겠습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일민단 지원사업 추진 재정립 문제는 아까 曺雄奎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대로 이 사업이 재외동포재단으로 이관된 2000년 이후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사업의 정책방향을 정립하여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외교통상부가 다시 직접 관장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徐廷和** 수고하셨어요.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曺雄奎 委員**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 활동 중의 하나인데 정치적으로 모든 정당이 여러 가지로 분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앞좌석이 계속 너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타당 상임위원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한나라당 위원들도 다 바쁘시지만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계속 상임위에 출석해서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 金雲龍 위원님께는 감사합니다마는 그 줄이 국민 보기에도 너무 민망스럽고, 또 행정부에서 나와 계신 분들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할 텐데 상임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徐廷和** 姜 수석과 행정실이 총동원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曺雄奎 위원님의 말씀을 실행하도록 해 주세요.

그런 뜻에서 제일 먼저 이인제 위원님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이인제 위원** 지난번 미주반 국정감사하면서 우리 감사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 세 가지만 우선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LA에 있는 한국학원에 예산지원을 100만 불을 전에 했는데,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100만 불을 시설지원비로 했는데 100만 불을 시설을 하지 않고 목적 외로 운영비로 쓴 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100만 불을 반환해라, 이렇게 해서 현재 5만 불이 반환이 되어 있고 나머지 95만 불 반환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재단이냐고 물어보니까 특별한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

말로 LA 동포사회의 뜻있는 분들이 조금씩 갹출하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부담을 해서 운영이 되는 어려운 학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영사관 감사에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100만 불 지원이 예정된 항목대로 지출이 안 되었더라도 횡령한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어려운 학교운영비로 전용이 되었다면 사후적으로 그것을 시정해 주든지 다른 방법을 해야지, 지금 그렇게 상환압력을 넣으면 결국 그 학원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동포사회의 교육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결론을 대체로 내고 돌아왔습니다.

감사원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외교통상부에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누구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 아는 분 없습니까?

우리가 국정감사할 때 이것 굉장히 역점을 두고 문제를 지적했던 것인데 오늘 자신 없으면 확인해서 감사원과도 협의하고……

**○外交通商部在外國民領事局長 金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교육부와 감사원과 협의해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장관님께서 챙겨 주십시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이인제 위원** 무슨 돈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억지로 받아낸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 이민 100주년이 되는 2005년이 내후년인데 멕시코 동포 사회의 요청 또 멕시코대사관의 평가를 통해서 외교부 본부에서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기획처에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100만 불을 요청했는데 외교부에서 절반 수준인 7억 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어요.

우리가 감사 가 본 결과 멕시코 동포 사회 100주년 기념을 위해서, 특히 멕시코 이민 역사를 보면 100년 전 유카탄주의 '애니깽'이라는 선인장 농장에 운명적으로 취업이민을 갔다가 조국이 일제식민지로 전락하는 바람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한 1000여 명의 동포가 이미 1만여 명으로 늘어났고 또 그 이후에 6000여 명이 이민을 가서 이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에 존재했던 한인회관의 맥이 끊어졌던 것을 복원하고 한글을 가르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감사위원들은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재외동포재단 사업인데 여기에 최소한 애초에 외교부가 요구했던 7억 원 정도는 꼭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예산 설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멕시코 이주 및 이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 순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추가,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우리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 확정할 때 이것이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획예산처 설득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회 상임위 활동 할 때도 얘기해서 유카탄주의 1만 명으로 늘어난 동포 사회 대부분이 아주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동포 사회를 위해서 생산적인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시설을 건립, 운영해서 의료복지 혜택을 주면 정체성도 강화되고 모국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기 때문에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멕시코대사관을 통해서 온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협의도 잘 진행되는 것 같고 보고서의 결론이 아주 명쾌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한·멕시코의 우호관계 또 연 20억 불에 달하는 무역흑자와 양자 간 통상 관계 또 유카탄주 한인 이주 100주년 또 향후 동반자적 관계 유지 등 양국 간 남남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투입되면 내후년에 완공될 수 있고 그러면 내후년은 바로 유카탄 이민이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상징성도 있고 현재 이 사업은 구상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일부라도 우선 시작하는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외교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KOICA 총재께서 말

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韓國國際協力團總裁 金錫鉉**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KOICA에서 전문가를 포함해서 조사단을 보냈는데 그런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100만 불 규모의 병원을 건립해 주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예산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당장 100만 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내년 2004년과 200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인제 위원** 내년 예산 투입이 가능합니까?

**○韓國國際協力團總裁 金錫鉉** 예, 가능합니다.

**○이인제 위원** KOICA에 포괄적으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韓國國際協力團總裁 金錫鉉** 이월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국회에서 이 사업항목을 심의 확정해 주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韓國國際協力團總裁 金錫鉉**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여기 국회에서 항목을 확정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하고 국회가 호흡을 맞춰서 이 사업을 출발해서 내후년 멕시코 100주년에 맞춰서 완공되고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國際協力團總裁 金錫鉉** 예.

**○이인제 위원**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연합뉴스 수신사업을 그냥 보고 지나갔는데 연합뉴스 수신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2002년에 7억 9000만 원에서 2003년에는 21억 6000만 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고 내년 예산은 44억 6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가율이거든요.

주무국장이 누구입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증가를 하는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外交通商部文化外交局長 朴興信**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신사를 육성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통신사들이 자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분야에 대해서 취재와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는 정보주권 보호 차원에서 적어도 1개의 자국 통신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가 기간통신사 육성 차원에서 연합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AFP, 스페인의 EFE, 대만의 CNA통신 등을 정부에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차원에서는 재외공관에서 이런 뉴스를 수신해서 프레스 릴리스라든지 뉴스불리튼(news bulletin), 뉴스레터들을 제작 배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지적되었다시피 다른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런 뉴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마는 연합뉴스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뉴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면서 현재는 영어뉴스만을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중국어라든지 스페인어, 불어, 일본어, 아랍어 등 제2외국어로도 서비스를 대폭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 증액 요인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통신사를 지원 육성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일본 외교부나 중국 외교부나 미국 외무성이나 자국의 통신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외공관을 통해서 수신료를 얼마나 책정해서 지원하는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들어야 됩니까?

**○外交通商部文化外交局長 朴興信** 다른 나라의 구체적인 지원실적은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 공관에 요청하면 금방 나올 테니까 다른 나라의 추세하고 같은지 확인해 주시지요.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文化外交局長 朴興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廷和** 수고하셨습니다.

金德龍 위원님!

**○金德龍 委員**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두 가지를 먼저 묻고 시간이 남으면 정책사항인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묻겠습니다.

이번에 재외동포재단의 내년 예산을 보니까 1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70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외한글학교와 민족학교 지원사업이 주가 되어 있는 교육사업비가 14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점은 무척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중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국외 입양인 초청연수 및 지원사업비가 중요성에

비해서 증액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액되었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해외 입양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정부와 해외 공관이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해외 입양인들은 바로 세계외교의 거점도 될 수 있고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방치해 왔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세계적인 해외 입양국입니다.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해외 입양인 수가 무려 15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매년 2000명 이상이 지금 해외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양인 문제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한데 이것이 시대의 큰 흐름에 역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국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외 입양인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양인 관련 사업을 보니까 2002년도까지 교육사업으로 분류했는데 이번에 2003년도부터는 문화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면서 예산상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문화사업예산이 전체 13억 64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중에 입양인 관련 예산은 오히려 2억 90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화사업이 12억 5400만 원일 때 3억 4000만 원 이었는데 총액은 늘어서 13억 64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줄어서 2억 90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입양인 사업이 차지하던 비중이 작년만 해도 27.1%였는데 이번에는 21.3%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사업 부분에 속하는 다른 사업, 예를 들면 한민족 문화제전 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단 파견사업, 재외동포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경우는 전부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사업 예산이 다 증가를 했고 솔직히 이런 사업들은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부서에서 여러 형태로 중복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데는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입양인 관련사업은 교류재단에서 전담할 사업인데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해외 입양 관련 사업이 1인당 2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사업이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겠고 해외 공연지원 같은 것도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지적했는데 선정기준이라든가 또 특정 공연물에 한해서 중점지원하고 그것도 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간단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 민단 지원도 아까 曺雄奎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5년째 똑같은 액수로 84억 7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외동포재단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재외동포재단 예산의 35.4%나 됩니다. 이 재외동포재단이 과연 이름 그대로 동포재단인지 민단재단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것이 재외동포재단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 동포들이 굉장히 화나게 됩니다.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001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에 민단지원 예산을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규모를 축소하자고 부대의견을 붙여서 통과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똑같은 액수로 편성되고 획일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타당한 일인지 밝혀 주시고 사실 제가 누구보다도 민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민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단 예산을 깎자고 얘기하는 것도 민단 사람들 얼굴 보기에 제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 각지에 있는 다른 동포들을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또 실제로 일본 민단 예산에 비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은 불과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민단이 절약하고 한다면 여기서 조금 줄여도 별 지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민단에서는 재일동포 21세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민단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단 지원에 책정된 예산을 다른 여타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들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질의를 하면 매번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민단이 지금 사업성과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높다느니 자구책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야 한다느니 하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한두 해 했으면 됐다, 이제는 좀 삭감해 가지고 일본 민단 지원하는 것을 깎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교포 단체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돕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도 지적되었지만 재외동포재단은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보다 동포를 위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민단은 전부 우리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서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재외동포재단 예산으로 책정하기보다는 외교부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만큼 주었으면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저는 외교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실 있는 관리 감독을 위해서도 외교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을 주더라도 지원하는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관운영경비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NGO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지원도 분명히 사업별 항목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기관운영경비식으로 잘못 편성해서 지원하는 데가 없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장관께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라크 추가파병은 국제정세라든가 국민여론의 추이, 국익 등을 고려해 가지고 파병 여부는 물론이고 규모나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1차 파병 때 보니까 정부가 정말 한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병결정은 해 놓고 전혀 국민적 설득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부담은 국회에 떠넘기고, 이중플레이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파병결정을 했는데 내부적인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은 전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결정해 놓고 감추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조사단을 파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2차 조사단을 파견하는 것 자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파병규모와 관련해서 최근에 보니까 아주 혼선이 대단합니다. 국방부 등은 5000～6000명 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정부가 3000여 명 선 이야기를 하더니 지난 며칠 전에는 李鍾奭 NSC 사무차장이 2000～3000명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장관이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한 정부의 입장이 결정되어야지 이것 때문에 도리어 국론이 분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파병방침을 정한 이후에 지금 파병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군대의 성격과 시기 그리고 군인 신변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인 현지 치안상태가 예상 밖으로 심각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월포위츠 부장관 숙소가 피습되었다든가 적십자 건물이 자폭테러를 받았다든가 또 이라크에서는 11월 초하루를 저항의 날로 규정했다든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지대공미사일이라든가 원격조정 지뢰 등으로 공격을 해올 정도로, 마치 정규군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파병을 고려했던 당시 상황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라든가 포르투갈도 치안문제 때문에 지금 파병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터키는 쿠르드족의 반대 때문에 파병을 미루고 있고, 태국 의회도 파병부대 철수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파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상황변화와 맞아떨어지면서 파병결정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부에서 이런 논의가 있는지, 그러니까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

기되고 있는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고 파병결정에 변함이 없다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이 점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2차 조사단에 대해서도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난번 1차 조사 때도 내부의 의견이 달라서 여러 가지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때는 정부가 별도조사를 보낸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기도 했고 이 조사단에 대한 신뢰성을 매우 떨어뜨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2차 조사단도 규모가 정부관계자 13명만으로 구성되고 조사기간도 아주 짧습니다. 10일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이렇게 작고 기간이 짧은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이미 파병규모도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안 했다면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조사단이 귀국하는 대로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규모를 결정해 가지고 17일과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미국 측에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단이 9일 도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의 보고서를 받아서 결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정부가 이미 결정해 놓았는지, 감추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병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정지가 모술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난 30일 미그기가 로켓공격을 받았고 지뢰 폭발 테러도 있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판단하기에는 비전투병이 간다면 실전경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고, 교전상태가 벌어진다면 과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를 놓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여당만 해도 비전투병 파병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고 청와대는 혼성부대 파병 운운하고 있는 정도…… 그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면 장관이 밝혀 주시고, 모술지역의 치안이 지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된다면 파병지역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이 점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줄입니다.

**○委員長 徐廷和** 수고하셨습니다.

金雲龍 위원님!

**○金雲龍 委員** 지난해 외교 전반으로 볼 때 외교분야의 상당한 국익신장을 이루는 외교활동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예산에 관해서는 소위에 저도 관여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염려사항만 얘기하겠습니다.

金德龍 위원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다 하셔서 얘기할 것이 별로 없는데 매일 TV를 보고 보도를 보면 헬리콥터 격추부터 시작해서 점점 게릴라전화하고 아주 어수선합니다. 유엔, 적십자 이런 것도 전부 철수하고 터키도 재고하겠다고 하고…… 하여튼 여기서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매일 터지고 혼선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파병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요르단에 나가 있는 우리 대리대사도 초치해서 얘기도 들었고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죽 들르면서 거기의 실력자들 얘기도 듣고 또 우리 공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쿠웨이트 빼놓고는 공관장들은 전부 신중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고 거기의 실력자들, 왕자들, 정부 책임자들은 전부 굉장한…… 물론 결정은 한국이 할 것이지만 위험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아랍국가들한테 미리 어떤 목적으로 파병을 한다 하는 사전조율, 협의, 통보,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랍에서 점령군으로 취급해서 전투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는 미국은 큰 놈이니까 손을 못 보지만 조그만 나라 한국 같은 데는 손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려들어 가면 안 된다, 손을 본다는 것이 테러공격도 있지만 기름 같은 것 잘라버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파병문제는 물론 한미관계에서 오는 외교적 실리, 핵문제 처리에 있어서 우리의 융통성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국회로 넘어올 텐데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 하는데 있

어서도 어떤 당은 반대 또는 비전투, 어떤 당은 비전투 쪽으로, 또 어떤 당은 반반 이렇게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파병에서 오는 외교적 실리, 한미관계에서 오는 외교적 실리, 핵문제 처리에 있어서의 우리의 기동성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 가지고 결정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전투, 비전투 하는데 공병단도 전투부대입니다. 제일 먼저 전방에 가서 다리 놓아주는 것도 공병단입니다. 옛날에는 전투공병단이라는 것도 있었지요. 후퇴할 때도 공병단이 다 다리 깔아서 후퇴시켜 주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비전투다, 전투다 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것도 군사경험이 있는 분들이 잘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인데 SOFA 개정과 관련한 용산기지 이전 문제, 우리보고 돈 다 내게 한다고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이 많고 또 스크린쿼터도 우리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자꾸 미국이 압력을 넣는 인상을 주어서 염려스럽고, 미국 대사관 숙소 건축, 이것은 아무래도 빨리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사업무를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참 좋은데 우리 위상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모든 분야에서 12대 강국으로서 여러 분야에 관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생기겠지요. 일본도 납북자 문제 가지고 수상이 나서서 하고 있고, 미국 같은 데는 장갑차로 애들 깔아 죽여도 그냥 빼돌려가지고 도망 보내게 하고, 독일은 수상이 직접 관광객이 알제리에 납치된 것 보상금까지 주면서 기자회견하고 다 살려내고 그럽니다. 우리도 국력은 12위라고 그러는데 외교는 해방 후 비실비실할 때부터의 습성이 아직 남아 있는지 12위에 맞는 활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인원도 증원을 하시고 예산도 늘리시고 증대하는 국민활동을 보호할 수 있게 업무체제를 강력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조그만 나라가 받아먹을 것 다 받아먹으면서 할 것 다 하고 주장 다 하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국제사법재판소니 인권법정 등등 해서 우리가 관련되는 것이 많을 텐데 그런 데도 좀 법률적으로 대비하시고, 예산에 법률비용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徐廷和** 河舜鳳 위원님!

**○河舜鳳 委員**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문제는 앞서 존경하는 金德龍 위원, 金雲龍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외정책이 정부 내부의 문제 때문에 대단한 혼선을 빚고 있다, 이것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직속으로 안보보좌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NSC가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고 종합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NSC 의견을 각 부처에 강요하고 있다는 데 국민들이 대단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아직도 대통령은 국회에 공식적인 견해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비서진들이 자기와 견해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면 사직하겠다, 또 NSC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파병의 성격과 인원까지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그야말로 국가기강이 해이를 넘어서 거의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NSC가 대외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고 악화시킨다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라크 파병 논의와 관련해서 이번에 청와대 결정과정에서 외교부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미국과 조율은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앞서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파병의 성격, 규모, 시기, 비용, 한미 간에 그동안 진행되어 온 협의내용과 정부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大中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자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金大中 전 대통령은 2001년 노벨평화상 상금, 라프토인권상 상금, 그리고 필라델피아 자유의메달 상금 등 모두 12억 2800여만 원을 아태재단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각종 정치사건에 개입해서 아태재단은 지난 2003년 1월 16일 재단해산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金大中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해서 모두 13억 5400여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金大中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상금 등을 그 상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일에 쓰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본인도 그것을 아태재단에 기부함으로써 뜻깊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될 것으로 지금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徐廷和 위원장, 金雲龍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아태재단이 해산을 결의했던 지난 2003년 1월 16일자 이사회 기록을 보면 '이 상금을 아태재단에 기부하면서 金大中 전 대통령 본인이 특별지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 그래서 아태재단이 해산하자 그 약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벨상 상금도 개인의 사적인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金大中 대통령 본인도 천명을 했고 노벨상이 갖는 의미와 그동안 했던 대국민 약속에 비추어서 이 상금을 본인이 돌려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상금이 노벨상 등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도록 나라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태재단의 법인을 관장했던 주무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국판 쉰들러, 독립유공자인 일본인 변호사 후세다쯔지의, 돌아가셨지만 이 분에게 우리 정부는 서훈을 해야 한다고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 답변을 보면 더구나 국가보훈처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외교통상부는 "지금까지 한일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훈장 주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전반적인 한일관계라든지 특히 최근의 국내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에 국내인 못지 않게 대단한 공헌을 한 후세다쯔지의 서훈은 빨리 결정되어야 된다, 오히려 외교통상부가 주도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교통상부장관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명예영사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 예산만 보더라도 명예영사 관련 예산은 모두 2억 2740만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명예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미화 1300불에서 2000불에 불과해서 통신비와 사무용품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예영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사서비스 취약지역까지 영사 업무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외교통상 관계라든지 교류촉진과 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명예영사제도를 활용한다면 매우 실효성이 있을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명예영사의 활동은 해당공관 및 공관을 관할하는 본부의 각국 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조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122명의 명예영사 가운데 재외한국인은 불과 6명입니다. 앞으로 명예영사는 재외국민영사국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임기를 3년으로 줄이더라도 문제가 있는 데는 교체하더라도 재외동포재단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각국에 나가 있는 교민을 활용하고 이른바 한민족 네트워크화를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데 명예영사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특히 아프리카, 중동국 경우에는 전 세계 유엔가입국가 가운데 절대 다수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액의 3분의 2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원유 수요의 77%를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관이 설치된 국가는 장관 아시다시피 26개국에 불과합니다.

명예영사마저 임명되지 않은 나라는 25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지역에 대한 외교적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되었던들 이번의 이라크 파병 같은 현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외교적 판단을 내리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가 미약한 국가들 간의 관계유지를 위한 인적 기반구축과 상주공관 부재에 따른 외교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명예영사제도를 유엔가입국가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의 소신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외교활동비 감사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외교활동비는 재외공관에서의 일상적인 외교활동 및 예기치 못한 외교사안에 대한 특별교섭활동을 수행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런데 2004년 외교활동비 예산을 보면 263억 6400만 원입니다. 정부의 타 부처와 달리 용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총액으로 편성되고 집행과정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자칫하면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의 2001년도 외교통상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해외공관의 오·만찬은 관련국의 외국인 접대가 원칙임에도 24개국 공관에서 벌어진 1077회의 행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62%인 665회가 외교와 무관한 정부고위인사나 출장자 등 국내인사를 위한 접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사는 오·만찬을 열지도 않았으면서 연 것처럼 하여 관련 경비를 유용까지 했습니다. 외교활동비는 대부분 해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경비의 부정적 사용 가능성도 높습니다. 적절히 통제를 해야 됩니다.

외교활동비는 총액으로 편성되어 사실상 집행에 대한 재정당국이나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라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본부 감사관실이 재외공관에 대한 외교활동비 등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정작 외교통상부 감사관실은 감사원 감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본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관도 평균 3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 대단히 형식적인 감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실시 내용을 매년 정리하여 감사지적사례집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년도 예산에서는 감사지적사례집 발간예산조차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거듭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외교통상부가 이 사업을 실행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장관께서는 감사관실이 왜 존재하는지 목적을 달성했다면 감사관실 직원 전원을 개방형 직제로 바꾸어 운영한다든지 해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지적사례집의 발간비용은 국회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줄 용의도 있으니만큼 반드시 시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인력진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라 하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우리의 국제기구 활동 강화와 국제기구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사업에는 2004년 예산이 올해보다 18.6% 증액된 14억 5200만 원입니다. 1996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그동안 매년 5명씩 선발하여 파견하던 것을 올해부터 7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기구에서 활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규모를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1인당 약 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파견기간이 끝난 19명 가운데 현재 절반도 안 되는 8명만이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성과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현재 외교통상부 직원들만으로 이루어지는 심사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비롯해 사전연수 및 국제기구 진출확대를 위한 각종 중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제도는 국제기구에 우리 국민을 진출시켜서 우리나라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도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雲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朴源弘 위원님 오전 중 이것으로……

**○朴源弘 委員**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식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비효율성, 정치자금의 비투명성에 따른 국가재원 낭비가 아주 심각하고 또 국제경쟁력이 정치권 때문에 저하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국가기관도 그 면에서 별 차이가 나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尹永寬 장관은 외교통상부의 CEO시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朴源弘 委員** 능률경영을 해야 되고 슬림화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朴源弘 委員** 그래서 경제원칙이라는 것이 경

제원론에 나왔다시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둬야 될 텐데, 재외공관을 더 만들어 가지고 국가외교력을 신장하는 데 돈을 써야 할 판인데, 지금 예산 면에서나 인원의 활용 면에서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개선할 점이 많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朴源弘 委員**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했다시피 외교통상부의 인원 운용이 정말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에는 대사니 공사니 경험과 여러 가지 식견을 가지고 필드에 나가서 뛰어야 할 간부급들이 T/O를 오버해서 넘쳐나고 해외공관에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해외공관은 128개 가운데 5명 이하 공관이 많고, 정말 서울에는 주사 기근이고 해외에는 간부 기근인 것 같지 않습니까?

T/O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세요?

시간 관계로 대답을 이따가 일괄적으로 하셔도 되겠지만, 외교통상부는 인원 전원을 동시에 돌리고 있는 셈인데 서울에 들어와 있으려는 간부급들이, 자제분들의 교육 때문에도 그렇다고 하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양지바른 곳에만 나가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원표보다 초과 인원이 본부에만 아까 수석전문위원 지적대로 44명이고 인건비는 88억 원이나 오버되고 말이지요. 별도 정원을 몇 명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아시지요?

시와 도의 자문대사라든지 공항대사라든지 모든 부처에 연락관이 나가 있습니다. 외교하라고 뽑아 놨는데, 그래서 길러 놓았더니 파견된 각 부처에서 환영을 받지도 못하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셈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기획예산처에서는 96명만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1명의 월급은 모자라는데, 간부급만 아니고 하위직도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 방위병이라는 공익근무요원, 국가기관에서는 사실 최소한으로 쓰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군에 근무하게 하든지 또는 대학원 같은 데 가서 공부시켜야 될 텐데 하부인력의, 급사 수준의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129명이나 되고 있고, 병무정책도 국가적으로 엉망이지만, 정말 인력의 낭비라고 봅니다. 외교부가 국가기관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쓰는 비율을 볼 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국회에도 18명 쓰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원 규모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요.

또 임시직 일용임금의 예산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사람들도 50명, 어쨌든 본부에서는 아랫도리 인원이 모자라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임시직 일용임금 받는 사람을 쓰고, 고급 인원들은 넘쳐나고, 이 점을 시정하시겠어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말씀하신 내용이 외교부 인력과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요인이 형성된 것은 아니고 10여 년, 20여 년에 걸친 행정의 누적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편해 나가야 될 것인가가 현재 외교부 인력운용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외교인력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 우리 인구의 3분의 1이지만 외교인력은 숫자로 볼 때 2배이고 태국의 경우에 우리 GDP의 5분의 1인데 외교인력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외교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외교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측면도 감안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源弘 委員** 물론이지요. 본 위원도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이기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외교인력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많이 늘어야 된다고 보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외교인력만 가지고도 장관이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 지금보다 큰 외교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아마 장관도 동감이실 것 같고요. 수십 년 쌓아온 적폐라고는 하지만 개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문제만 더 지적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문제인데요. 국회 상임위원회나 또는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보내려면 화끈하게 보내든지 안 보내려면 아예 처음부터 못 보내겠다고 하든지 해야지 정말 미국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것은 근본적인 생각을 청와대부터 바꿔야 되고 尹 장관과 또 반기문 수석이든지 국방부의 관계자들이든지 소신껏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는 국제적으로 망신만 당하고 나중에

실익은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른바 한미동맹파, 제가 지적은 안 해도 누구라는 짐작은 하시겠지만, 또 자주외교파 중에서 아마 자주외교파의 손을 들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쪽은 소외되고, NSC에 정말 문제가 많지요. 아까 존경하는 河舜鳳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내부 파워게임에서도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가 어떠신지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폴란드형 전투사단에서 이런 저런 안이 나오다가 이제는 3000명 선, 전투병 및 비전투병 혼성부대 파병안, 이런 얘기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월 30일에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상이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1만 명까지 거론되던 파병규모가 3분의 1 내지 5분의 1로 줄어들고 있고, 성격도 전투병에서 혼성부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관의 평소 소신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의 소신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수혁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해서 국방부 NSC 등 대미파병협의단이 가서 우리 정부안을 어떻게 미국 측에 제시한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파병을 하면 1만 명 파병이건 3000명 파병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파병한다는 자체에서는 비전투병 전투병 역시 파병입니다. 그런데 전투병이 적으면 우리가 얕잡아 보여서 그만큼 공격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고요. 또 대민지원업무라든지 이라크에서의 이라크 국민에 대한 우리들의 이미지 제고 같은 것도 자꾸 사고가 나면 더 나빠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주장했다시피 요청국인 미국의 기대에 맞춰 가지고 조건 없이 제 때에 상당한 규모로 파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파병 결정 이후에 물론 그런 예상을 했었겠지만 이라크를 떠나라는 일시 납치사건도 있었고 파병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런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슬람 국가의 재외공관에 대한 대테러 비상경계령을 외교통상부에서 내렸지요?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雲龍** 이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부영 위원** 제가 위원장님 배려로 5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쪽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문제제기하려는 것은 예산 전체 규모와 관련해서인데, 외교부 예산이 국가 총예산의 0.66%지요? 이것이 다른 나라들, 큰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나라들의 총예산에 비교해 봐도 대단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전대결 시대와 달리 외교가 다변화되고 우리처럼 분단국이면서도 복잡한 외교관계 속에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외교 예산을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입해야 국가적 위기의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인식이 외교부 자체뿐만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에서부터 심각히 요구되는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해도 전체 평균증가율인 2.1%에 비해서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부족한 예산증가라고 봅니다. 지금 외교통상부의 업무수요에 비해 보면 이제는 외교부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98년부터 국제통상업무까지 외교통상부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FTA 협상 문제라든지 북핵문제라든지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예산관 자체가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곧 이라크 파병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이슬람권 외교 필요성이 증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 전체 예산에 아중동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0.1%예요. 이것은 굉장히 정체된 예산관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중동국 예산이 오히려 2003년도 대비해서 500만 원이 감액된 8억 7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인식에 심각성이 있는 것 아니냐, 문제가 있다……

아중동국의 경우 전 세계 유엔 가입국가 189개국 중에서 66개 국가의 외교관계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이 지역은 해외건설 수주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건설수출시장이고 원유 수요의 약 77% 이상을 공급하는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안의 약 0.1%에 해당하는 8억 7300만 원만 투입되고 있어요. 또 이라크 파병까지 앞에 두고 있는데 아중동국 예산이 이런 정도 돼 가지고 어떻게 이라크 파병 이후에 악화될 수도 있는 지역의 외교수요에 충당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중동국 특히 중동 쪽의 예산을 이런 정도밖에 투입 안 하고 소홀히 하는 데에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국감 시작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지적하고 존경하는 河舜鳳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감사관실 감사기능을 거의 완전히 포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감사관을 불러내서 먼저 번의 감사관이 출석 안 하고 대리로 어떤 심의관이 섰던 점을 지적했었습니다마는 너무 외교통상부의 감사기능 자체가 자기 식구들 봐주는 자세를 보여서는 다른 감사기관, 예를 들면 감사원의 지적을 통해서 외교부가 국내외에 망신당하는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부 감사기관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감사원이나 청와대 감사기능 같은 데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된 불을 더 맞느니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외부로 노출돼서 망신당하고 우리 외교 역량 자체가 밖에 나가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되는 일은 이제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올해 소관 예산안의 1.4%에 해당하고 이는 2003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2억 15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정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인력운용, 불법적인 직위 남설, 부적절한 외교활동비 운영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외교통상부 자체 안의 감사기능을 통해서 막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감사지적사례집 같은 것도 외교부 자체가 발간하십시오. 그리고 내부 회람 같은 것을 통해서 내부가 그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난번에도 장관께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됐어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하면서 지적한 내용이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면 무엇 하러 우리가 국정감사 합니까? 장관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일민단 지원사업 추진방향 문제인데요. 이것은 제가 몇 년째 지적했고, 여야 위원들이 다 지적한 사항인데 아무리 지적해도 변동 없이 또 그대로 반영해 놓았어요. 매년 10%씩 재일민단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 가기로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의 다른 지역의 동포들 지원, 더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다른 지역에 재외국민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 예산을 돌려서 지원하자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이동풍 격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관, 이 자리에서 잠깐 답변해 보세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매년 10%씩 줄여서 다른 데 더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돌리자고 했는데, 물론 작년에는 장관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난 5월, 6월에도 지적을 했고, 감사 시작하기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요. 외교통상부는 국회 얘기는 전혀 듣지 않는 부처입니까? 장관은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도 그것을 또 지적했습니다. 또 본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도 민단에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다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이 문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유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기획실장이 보고드린 대로 외교부 쪽으로 예산을 이관하는 차원에서 해결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통외통위에서 매년 10%씩 삭감해 가기로 했었다는 사실은 제가 죄송하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부영 위원** 그러면 밑의 기획관리실장이나 그 밑의 예산담당관들은 계속 전달된 이야기인데 장관께 보고도 안 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지적한 것을 마이동풍 격으로 반영을 안 시키면 예산심의는 무엇 하려고 합니까? 그 점은 예결위원들도 그런 의견들을 함께 가지고 계실 텐데 조정을 해서 다시 내세요. 이럴 수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雲龍**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委員長 徐廷和**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秋美愛 위원님!

**○秋美愛 委員**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파병문제와 북한 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을 앞두고 외교부에서 많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6자회담에 대해서

긴장감이 초기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조율해 내는 열의를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일 부시 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의에서 북한이 핵 폐기에 진전을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다자 틀 내에서 대북 안전보장을 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침 2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부시 대통령의 그러한 방안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은 서면 불가침 담보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들과 공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10월 30일 金正日 위원장도 6자회담이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된다면 6자회담에 나갈 용의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서 북한 스스로 6자회담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또 그 성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서 상당히 전망이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깊이 있는 분석 속에서 다시 한번 미국과 북에 대해서 상당한 대화를 통해서 설득해 내는 외교가 통일부와 함께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미국이 서면안전보장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 폐기 진전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진전의 뜻이 무엇이냐, 그 개념과 범위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진전이라는 의미가 북한이 핵 폐기를 먼저 개시하고 미국이 핵 폐기 진행과정을 검증, 확인한 뒤에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해 준다는 의미로서, 요약하자면 단계적이고 병행적인 접근일 경우에 미국의 입장은 좀더 유연해졌다, 좀더 진보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반길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약 미국의 그런 표현이 핵 동결, 사찰 수용 등 북한의 상당한 핵 폐기 노력이 확인된 후에 안전보장을 해 주겠다는 종전 입장과 별 다른 바 없는 선 핵 폐기의 강조라면 이 경우에 북한은 또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미국의 진전이라는 표현이 어느 쪽 입장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미국 부시 대통령의 대북 안전보장 발언의 전제로서 핵 폐기의 진전이라는 것은 모든 핵 폐기 과정을 북한이 먼저 한 다음에야만 안전보장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秋美愛 委員** 그러면 종전보다는 미국 입장이 폭이 좀 넓어졌다고 할까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그렇습니다.

**○秋美愛 委員**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쌍무적이라는 표현과 조약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북이 오랫동안 고수해 왔던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주장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외무성 발표문에서는 그 단어가 빠졌지만 그것이 그동안 불가침조약을 주장해 오던 북한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하느냐는 좀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秋美愛 委員** 부시는 다자 틀 내에 서면안전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미국의 안전보장이라는 표현을 북한이 사용한 불가침이라는 표현과 대비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북이 바라는 金正日 체제보장과는 다른 의미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북한 자체의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북한의 국내문제이지 미국이 담보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일 것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의한 金正日 정권에 대한 공격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선뜻 이라크 침공을 했고 사담 후세인 체제전복을 한 선례에서 보듯이 안전보장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정작 북한이 바라는 것은 체제보장을 원한다고 봐야지만 북의 입장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차피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체제보장을 해 준다 하더라도 아까 그런 논리 전개에서 보듯이 그 자체는 북의 국내문제인 것이고

밖에서 어느 나라가 그 정권을 보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인 것이지 외국이 담보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더 나아가서 체제보장까지 바란다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반작용으로서 북한 핵 포기 선언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미국은 별로 손해 볼 것도 없고 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미국이 크게 한 역할을 해 준다 이렇게 우리로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까? 우리 외교에서 그런 주장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미국의 안전보장을 대가로 북한이 핵 포기 선언을 하고 그것을 이행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교의 목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秋美愛 委員**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안전보장과 체제보장 사이의 함축된 의미 차이로 상당한 신경전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미국으로서는 별 손해 볼 것도 없고 또 어차피 체제보장이라는 것이 미국이 담보해 준다고 해서 북한의 내부 혼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인심을 쓰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더 강조하면 북한도 자기들 입장을 한국이 중재역할을 해 주는 것 같아서 신뢰를 보일 것이고, 그러면 남북문제도 분위기가 더 좋아지면서 동시에 핵문제를 푸는 하나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라인에서도 미국의 의미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추종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설득력을 보태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보장의 방법에 대해서, 다자 틀 내에서의 대북 안전보장이 과연 무슨 의미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북한으로서는 형식적으로는 다자보장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차피 이 문제가 북미 간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 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정권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런 법적·제도적 효력이 변치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미 의회의 결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외신보도에 의하면 이런 방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방식,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방식으로서 미·영·러가 참가한 우크라이나 모델처럼 다자 간의 안전보장 방식, 세 번째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제리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6자회담 관련국이 서명하는 미국 대통령의 선언문 방식, 다섯 번째는 북한을 포함시켜서 6자회담 관련국 모두가 공식적으로 서명하는 일종의 협정 방식 이렇게 상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이행 수준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안전보장을 해 주는 3단계 접근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그런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북한이 핵 폐기를 개시하면서 그 진행 수준에 따라서 미 행정부가 안전보장을 문서화해 주고, 다음 핵 폐기가 더 진전되는 수준에서 미 행정부의 문서내용을 미 의회 차원에서 결의해 주어서 북미 간의 효력을 먼저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핵 폐기 완료단계에 맞추어서 6자회담 관련국이 이를 다시 최종적으로 승인해 줌으로써 국제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전임 金大中 대통령님의 김대중도서관 개관 행사장에서 金大中 전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시면서 북한 핵문제는 미·북 간에 풀어야 될 문제이고 그 주변국은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핵문제에 대해서 좀더 정직하고 적극적인 진솔한 자세로 나와야 될 것이고 미국으로서도 체제보장 등에 대한 의사 표현을 좀더 해서 미·북 간 양자가 풀어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시가 제안한 안전보장은 그 구체적 형식, 북한의 의무 이행에 대한 검증 방법, 문서의 효력 발생 전 북한이 이행해야 될 사안, 이 세 가지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전혀 유구무언입니다. 아무런 구체적 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적 입장, 주도적인 중재자 입장에 섰다고 볼 때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더 적극적으로 밝힐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핵문제가 터져 나온 이후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금방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주도적인 중재 입장에서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秋美愛 委員** 황장엽 씨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장엽 씨가 미국에서 지난달 30일 미 하원 기자회견에서 핵개발을 보류한다고 북한 金正日 독재체제를 보장한다는 것은 세계 인민에 대한 기만이며 비원칙적인 태도라고 하면서 미국의 대북 유화정책을 비난했다, 이렇게 보도가 들어 왔습니다.

왜 그렇게 황장엽 씨가 미묘한 때에 미국에 가서 그런 미묘한 발언을 했는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황장엽 씨의 그런 발언은 하루 이틀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아마 황장엽 씨의 기본적인 소신인 것 같습니다. 자기 소신의 일단을 미 하원 기자회견에서 밝히는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秋美愛 委員** 북한정권 내에서의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인사가 탈북을 한 후에 한국에 와서 남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고를 했을 것 같은 데 이 미묘한 때에 미국 가서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대비와 그것이 개인 소신 발언이라고 해서 파장을 미칠만한 일을 그냥 방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언론보도 중 하나가 전반적으로 황장엽 씨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미국 조야의 반응이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해 주려고 미국까지 왔느냐라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이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秋美愛 委員** 용산기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지이전비용이, 우리 측 부담이 아주 막대해서 여론도 반발이 큽니다.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는 차치하고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미국 국방부 소속 이외의 시설이 용산기지 내에 있었던 것은 명백한 불법 점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불법점유시설에 대해서도 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아마도 불법점유시설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미국대사관 숙소이전문제를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불법은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허락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임시적으로 허락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전비용은 우리가 대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秋美愛 委員** 이전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대사관 숙소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입니다.

**○秋美愛 委員** 대사관 숙소 이외에는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대체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것은 대사관 숙소로 알고 있습니다.

**○秋美愛 委員** 미국 국방부 소속 이외의 시설 같으면 거기에 점유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시설이고 언제 허락을 해 주었는지, 그런 것이 근거가 있는 사유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전 시에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알겠습니다.

**○秋美愛 委員** 그리고 또한 지난번 지역군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성격이 좀 바뀌지 않느냐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에게 시설을 공여한 데 대해서 SOFA에 근거했던 것을 주둔 미군의 성격이 조금 바뀐다면 새롭게 정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그때 상황변경이 되었을 때는 그런 상황변경에 따라서 새로운 미군기지 주둔의 문제, 기지변경의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양국 간에 정할 그런 사항은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그럴 여지는 없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 정부에서 요청해서 盧泰愚 대통령 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미국 측에게 이전비용은 우리가 대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문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88년 이후에 한미 간에 어떤 공동성명이라든지 협의내용에서 수시로 이야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함께 동북아의 안정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새삼스럽게 결부시킨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秋美愛 委員** 주한미군의 역할이 좀더 광범위

하게 동북아 지역군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이전문제까지도 또 비용까지도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원래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약속을 했던 것이 용산기지 이전을 촉구하고 그것에 따른 이전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내부의 예를 들어서 대사관 숙소문제라든지 이것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차원에서 이전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주한미군 역할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徐廷和 위원장, 曺雄奎 간사와 사회교대)

**○秋美愛 委員**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교활동비 운영문제 또 관리문제를 보니까 외교활동비는 다른 업무추진비와는 달라서 외교활동이라는 특수한 소요에 충당되는 외교통상부의 고유한 사업비이기는 합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0억 1200만 원이 증가된 263억 6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이송경비가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외교활동비가 구체적인 편성이나 집행내역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특수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집행실태를 살펴보니까 여타 비목으로 전용되거나 국제관계자문대사의 활동지원경비로 월정액이 지급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용된 것을 보니까 2002년에 1억 9700만 원이 여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국제관계자문대사 9인에 대해서도 2002년에 9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감사원도 2002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재외공관 주중 廣州총영사관의 사례인데 허위의 외교활동비 신청서를 작성해서 외교활동비를 부당하게 인출하고 이를 공관의 고용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본부 직원에게도 1700달러를 외교행랑을 통해서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교활동비가 그 집행내역이 3급비밀로 분류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그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역이용해 가지고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불법·부당한 외교활동 집행사례가 있다면 이것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 외교활동비 총 규모를 규제해야 되고 또 동시에 국제관계 자문대사 활동비와 같이 애매한 것은 그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업무추진비 등을 비밀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예산으로 계상해서 편성하고 또 집행한 이후에도 감사관실을 통해서 엄정한 자체 감사를 받게 한다든지 해서 그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말씀하신 대로 외교활동이나 국가안보정책 수행활동의 특성상 대외 공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집행액 총액과 분야별 집행액 등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활동비 집행 시 회계장부 및 회계 관련 자료의 기록 유지를 철저하게 해서 내부적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있고 특히 2001년 7월부터는 외교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기획관리실이나 감사관실에서 매월 외교활동비 집행실적 및 적정 집행 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키로 하는 등 외교부 자체의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秋美愛 委員** 감사관 지적사례 같은 것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曺雄奎** 수고하셨습니다.

金鍾河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金鍾河 委員** 金鍾河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좀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답변을 새로운 각도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 장관께서 6자회담이 12월 초에는 열릴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을 보도에서 봤는데 사실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기자 질문에 대답한 것은 12월 초·중순까지 열렸으면 좋겠다는 제 희망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金鍾河 委員** 희망을 얘기했지 미국하고 무슨 근거로 한 것이 아니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렇습니다. 아직 일자에 관한 외교적인 교섭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金鍾河 委員** 그런데 내면적으로 미국하고 교감은, 연락은 되고 있는 거지요? 북한하고 접촉한 것이나 여러 가지……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한미 간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金鍾河 委員** 그러면 미국의 주장은 원래 선 핵 포기 그다음에 보장 아닙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원래는 그랬습니다마는……

**○金鍾河 委員** 그리고 북한은 동시에 하자는 거지요? 그것 아닙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렇게 얘기는……

**○金鍾河 委員** 그러면 중국 상무위원장이 북한에 가서 긍정적으로 했다는 것은 미국이 선 핵 포기 후 보장하는 것을 양보해 가지고 동시에 하자는 데 합의했다는 겁니까? 장관 생각은 어때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미국의 입장도 북한이 먼저 핵 폐기를 해야 그다음에 미국이 취할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왔습니다.

예를 들면 핵 폐기 용의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핵 폐기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핵 폐기를 종결짓고 하는 식의 작은 단계를 나누어서 그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캘리 차관보가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북한 측 주장과의 합의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 있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金鍾河 委員** 소위 안전보장이라는 것이 처음에 북미 간에 안전보장 서명을 하자는 얘기였지요? 북한은 다자들이, 6자회담에 참석하는 5개 나라가 보장해 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미국 측에서 다자 보장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고 있는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진 바 없고 또 그것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북한 측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화답하는 의미로 자기들도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河 委員**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다자, 예를 들면 북한을 뺀 6자회담에 참석하는 다섯 나라가 보장한 것이 100%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북한이 그러한 미국의 조치를 어떤 논의와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함께……

**○金鍾河 委員** 그게 아니라 내 얘기는, 보장을 한다고 5자들이 서명을 했다고 합시다. 북한이 그것을 100% 보장이라고,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金鍾河 委員** 그런데 북한 입장을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서명 아무리 해봐도 폐기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남북기본합의서도 남북이 해 놓고는 '우리 안 한다' 하면 그만이라는 말이에요. 북한이 지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94년도 제네바협정도 자기네 일방적으로…… 협정이 아니라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폐기하면 그만인데, 미국하고 다자회담 하다가 '이것은 아니다' 해버리면 그만인데 그것을 100% 구속력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런데 이번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 쪽은 북한 측이 아니라 북한이 상대하는 다른 다섯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입장이 좀 바뀌어져 있는……

**○金鍾河 委員** 그런데 자기들도 서명까지 해놓고 파기한 경력이 있는데 상대방들이 만약 자기들처럼 '그거 없는 것으로 하자' 해버릴 때, 그 사람들이 100%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자기들이 안 지켰으니까 남들도 안 지킬 것이라고 볼지, 아니면 남들은 잘 지킬 것이라고 볼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金鍾河 委員** 그래서 이것은 좀 외교적인 장난인데 북한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2월 초에 할 것이라는 것은 정황이 아니라 尹 장관의 희망사항이었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예산심의에 관한 현안문제 한 번 더 묻겠어요.

秋美愛 위원도 얘기하고 여러 위원이 제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정감사에서도 늘 이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회의를 앞두고 한미 간에 소위 이전부담원칙을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 후의 잔류부대 면적을 16만 평으로 하고 한국 측이 부담할 이전비용을 30억 달러로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사실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보도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金鍾河 委員**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렇습니다.

**○金鍾河 委員**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용산기지 협상팀은 이에 대하여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장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인한 거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金鍾河 委員** 盧武鉉 대통령은 제3의 기관에 협상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지시한 제3의 기관은 어디라고 장관은 생각합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저는 그러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金鍾河 委員**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金鍾河 委員** 17일에 한미연례안보회의를 하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金鍾河 委員** 그때 외교부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국방부에서 주로 하고 있고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金鍾河 委員** 그것은 국방부에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지요.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렇습니다.

**○金鍾河 委員** 그리고 헌법 제60조를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알고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金鍾河 委員** 또한 회계감사 전문가들은 당시 90년에 체결된 합의각서의 위헌성과 불평등성, 그리고 정부의 비용추산의 적절성 등에 대한 국민감사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장관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바로 말씀하신 그 내용,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예산지출이 가능한 이유 때문에 용산기지 이전협정을 MOA MOU 형식에서 바꿔 나가는 작업을 이제까지 협상을 해오고 있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金鍾河 委員** 다음 질의입니다.

역시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요즘 보도를 보면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무엇인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장관께 몇 가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규모를 3000명 선으로 정하고 전투병과 비전투병 혼성부대를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규모나 성격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파병의 원칙은 결정되었습니다.

**○金鍾河 委員** 그러니까 3000명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거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金鍾河 委員** 丁世鉉 통일부장관이 남북축전 위증해 가지고 여기에서 고발당한 신문보도 알고 있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金鍾河 委員** 장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잘 알고 있습니다.

**○金鍾河 委員** 어제 조선일보에 '젊은 병사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하는 사설이 났던데 읽어봤어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金鍾河 委員** 한번 읽어보세요. 장관인데 그런 것을 읽어봐야지요. 盧 대통령이 조선일보 보지 말란다고 장관이 안 보면 되나요. 이런 파병에

관한 것이 있으면 조그만 것 하나도 여론이 어떤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잘 알겠습니다.

**○金鍾河 委員** 항간에는 지난달 27일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대통령의 함구령까지 어겨가면서 3000명 선이라고 말했던 대로 결국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NSC하고 코드가 맞다나, 386세대라는 이종석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당시 이 발언에 대해서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고 반박하던 국방장관도 이종석 차장의 발언을 의식해 국방부 의견을 3000명으로 낮추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요.

이같은 일련의 사항을 종합해 보면 이라크 파병에 정작 주무부서인 외교부와 국방부는 들러리고 극소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 일을 주무르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외교 주무장관으로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말씀드린 대로 이라크 파병의 규모와 성격, 시기 이런 모든 문제는 미국과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우리 2차 파견단, 이라크 조사단의 보고를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지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추후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부의 최종 입장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金鍾河 委員** 그런데 이종석 차장이라는 사람 주장에 외교부와 국방부는 밀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밀리고 밀고의 문제가 아니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 측과 관련부처 간의 협의는 충분히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金鍾河 委員** 그러면 외교통상부장관이 생각하는 파병에 대한 규모와 시기 그리고 파병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지 입장을 밝혀 보세요. 얼렁뚱땅하지 마시고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 문제가 현안으로 되어 있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장관의 할 일은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저의 1차적인 임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해 가지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鍾河 委員** 장관의 복안은 가지고 있어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鍾河 委員** 글쎄, 이래 이래 하겠다는 복안은 가지고 있느냐고요? 우리한테 발표는 못 하더라도 대통령께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안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초기적인 안은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협의결과, 우리 조사단의 보고내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鍾河 委員** 역사적으로 尹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면할 것이 아니라 역사에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남을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학자적인 양심과 지식을 가지고 소신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잘 알겠습니다.

**○金鍾河 委員** 다음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외공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러시아 동포 사회는 한반도와 오랜 단절로 인하여 한민족의 정체성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수민족으로서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 살아가는 55만 8000 고려인 자체의 민족성 회복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1816년 고려인의 극동 이주 이후 러시아 이주 50주년도 1차대전으로 무산되었고 100주년에 해당하는 1964년에도 구소련의 사회주의체제에서 기념행사를 거론할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러시아 이민 140주년 사업은 동포사회의 발전과 한민족의 정체성 제고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관, 그렇게 생각하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金鍾河 委員** 따라서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장관도 동의하시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동의합니다.

**○金鍾河 委員** 그런데 그것이 이번 예산에 1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金鍾河 委員** 그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상황인데 한 1억 5000 더 해가지고 3억을 증액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통외통위에서 좀 도와주시면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金鍾河 委員** 왜냐하면 한 3억 이상 되어야, 해외동포 민단 도와주는 몇십 억 떼어서라도…… 우리가 모스크바 현지에 국정감사 가봤는데 정말 절실해요. 30억이라도 주고 싶은 감을 갖고 왔습니다. 최소한 3억 이상으로 늘려줄 수 있도록, 그럴 용의가 있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金鍾河 委員**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권발급 수입과다 문제는 아까 제기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한일역사 공동연구하는 것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鍾河 委員** 예산심의하는데 보니까 한일역사 공동연구비가 1억 7900만 원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현재 연구결과를 중간 중간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연구보고서는 그때 그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구가 완결된 뒤에……

**○金鍾河 委員** 중간보고는 일체 없어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연구가 종결된 다음에 받습니다.

**○金鍾河 委員** 현재까지 한일역사 공동연구에 지원한 돈 합계가 얼마쯤 됩니까? 실무자 알고 있어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금년도는 1억 9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金鍾河 委員**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총계 얼마쯤 됐어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총 액수가 1억 9400입니다.

**○金鍾河 委員** 그것은 내년 예산 아니에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내년도는 2억 2000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金鍾河 委員** 그것은 내년예산이고 현재까지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이 사업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金鍾河 委員** 요즘 이시하라 신타로인가 누구인가 망언 나온 것 보셨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金鍾河 委員** 예를 들어 한일역사공동연구회라는 데서 거기에 대한 성명이나 뭐가 나가야 됩니다. 한국대표 있지요? 한일 역사왜곡 연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도적 인사라는 사람이 말장난하는 그런 것 정도는 좀 한일역사 공동연구에 방해가 된다, 지장 주는 것 삼가라고 할만하지 않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일역사공동연구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金鍾河 委員** 지금 한국대표로 누가 나가 있어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국민대 명예교수인 조동걸 교수 등 역사학자입니다.

**○金鍾河 委員** 일본에 그런 극우파들의 성명이 나올 때 외교부에서 정식 대변인을 통해서 성명 낸 일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물론입니다. 발표했습니다.

**○金鍾河 委員** 그러면 외교부에서 예를 들어 지금 공동연구회 일본 측 대표한테 이야기하든지, 외교부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도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말이지요. 돈 주고 공동연구 왜 시킵니까? 외교부에서 그런 것 좀 감독하세요. 그런 것 하라고 연구를 시켰는데 연구만 시켜놓고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면 어떡해요? 진짜 그런 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알겠습니다.

**○金鍾河 委員** 온 민족이 지금 공분하고 있는데 일본의 그런 데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햇볕정책 바람에 대북안보가 지금 완전히 마비되어 희미하듯이 일본관계도 지금, 내가 지금 뭐라 해봐야…… 이러다 다 잡혀 먹혀요. 외교부가 그런 애국심을 발휘해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尹 장관!

앞으로 하나하나 소소한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감정 중요합니다. 역시 尹 장관을 외교부 장관에 잘 앉혔다 하는 말을 좀 듣게 하세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알겠습니다.

**○金鍾河 委員**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曺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건 위원** 유재건 위원입니다.

금년도 1년 동안을 아주 바쁘게 살았습니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선 이후에 외교팀의 노력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이 너무 급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긍정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더 많이 듣는 그런 입장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개방시대를 맞이해서 경제·통상 외교를 적극 전개해서 외교역량을 강화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남북분단의 질곡을 짊어진데다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 두 가지가 걸려 있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문제를 같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앞장선 외교통상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20일간에 걸쳐서 외국공관 및 본부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람직하고 이미 계획하신 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뒷받침되는 내년도 예산문제를 토의하는 시간인데 제도 자체가 15분 정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제가 늘 주장하는 동업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의논해야 될 텐데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겉핥기 비슷하게 제목만 얘기하고 끝나는 질의가 될 염려가 있어서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마는 가능하면 시간에 맞추어서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북핵문제였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북핵 원칙으로 세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북한 핵을 절대 불용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군사적인 방법은 안 되고 대화와 외교적으로 해결한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지금 제2차 6자회담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다소 안심은 하지만 이미 金鍾河 위원님이나 秋美愛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심할 단계가 아니다, 계속해서 북한과 다섯 나라의 입장을 예의관찰하면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주도적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바쁘게 움직여야 될 때지 방심하고 앉아서 2차 회담이 열리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그리고 미국도 한 발짝 물러섰고 북한도 그렇게 빡빡하게 우기던 고집을 우방궈 전인대위원장이 다녀간 다음에, 원조를 약속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좀 나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다 하고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지난 8월 13일 尹 장관께서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3단계로 제시한 것이 아주 적중했고 미국이나 북한이나 기타 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도적인 역할의 하나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심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6자회담에다 우리 운명을 모두 맡기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다른 안도 내야 됩니다.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이런 때 특사를 좀 보내서 북쪽하고 우리하고 조율도 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특사로서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나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나 혹은 金大中 대통령 같은 분이 가셔서 정말 윈-윈 할 수 있는, 같이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외교부에서 특사문제를 가지고 의논하신 적이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아직은 없습니다.

**○유재건 위원** NSC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없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건 위원** 조금 전에 秋美愛 위원께서 3단계 접근방식을 제안하셨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단계적으로 북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또 이쪽에서 대항하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국회까지 가고 하는 접근방법이 尹 장관이 일본에서 기자들에게 얘기한 것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겠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재건 위원** 그 문제를 미국 쪽하고도 같이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실무차원에서 한·미·일 실무당국자회담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열렸고 그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 측의 견해는 충분히 반영을 죽 해 오고 있습니다.

**○유재건 위원** 부탁말씀 드린 대로 지금이 아주 중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안을 내시고 같이 협의해서 정말 동북아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랜 질곡의 역사를 가진 동북아에 있는 몇 나라들이 주도적으로 다자외교의 틀 안에서 같이 협의하고, 1 대 1로 협

의하는 것이 처음인데 이 6자 회담이 성사가 잘 되어서 한반도 평화유지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내세운 동북아경제중심의 새로운 공동경영을 위한 윈-윈 정책에 한국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고 이웃나라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한 연구와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국제분담금을 17.6% 증액해 가지고 이번에 조금 국가위상에 맞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WHO의 사무총장이 한국분이신데 거기에 이번에 781만 8000불 정도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무총장에 대해서 4000여 명의 부하직원을 통솔하는 국제기구의 제일 상위직으로 우리의 자랑이 되었는데 나라사정이 어려우니 300만 불만 깎아달라고 그래서 상당히 얼굴 뜨거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외교통상부가 앞장서서 주선하고 그리고 예산처가 적극 협력을 해서 300만 불 깎아달라는 얘기를 금년에 안 하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 아시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허락하시면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건 위원** 그 문제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서 만나보았는데 정말 외교통상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무총장까지 만들어놓은 것은 우리나라 위상에 큰 도움이 되는데 300만 불 깎아달라는 것은 금년에는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外交通商部企劃管理室長 曺永載**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그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포인트를 강조해 가지고 결국은 예산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처에서 양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스카운트를 안 받는 방향으로, 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재건 위원** 잘 하셨어요. 외교통상부를 대신해서 존경하는 朴源弘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지금 애를 쓰는데 거기에도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원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효율성과 투명한 집행입니다. 감사원 보고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얼굴 뜨거웠다는 얘기를…… 지난번 감사 때도 여러분과 같이 심각하게 우리가 반성하면서 외교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얼굴을 위해서도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고 서로 다짐한 것이 바로 한 달 전 일입니다. 오늘도 몇 분의 위원들이 이미 지적한 대로 이런 부끄러운, 재외공관의 운영을 잘못 한다든가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야 외교통상위원들은 늘 외교부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 전 세계를 다녀보아도 외교부 직원이 우리 같이 적은 데가 없고 국가예산 대비해서 외교부 예산이 이렇게 적은 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균형이 맞아야 되고 또 한쪽만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미 제안하신 예산보다도 더 올리기를 소망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예산을 축냈다, 낭비했다, 그 말단 외교관들과 책임 있는 기관장들이 실수해 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고 하면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호언을 하고 여러 번 지적한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탈냉전시대를 맞아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비롯한 주요국가들은 외교부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해서 위상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국제경쟁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8년 국제통상업무까지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액 대비 외교재원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1998년에 0.78%, 117조 몇억 원 되는 총 예산에서 2004년에도 0.66%로 1%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종래에는 대미외교에 치중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무리없는 외교활동이 가능했지만 외교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외교의 다변화와 함께 경제·통상 분야로까지 외교역량을 확대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이 예산도 제대로 국가위상에 맞게 편성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국정비전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제시하였고, 특히 동북아경제중심국가를 표방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예산상

의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주요나라들의 정부예산 대비 외교예산의 비율을 보면 미국은 전체예산의 1.06%, 일본이 0.91%, 영국이 1.10%, 캐나다가 1.06%, 싱가포르가 0.97%, 인도네시아가 1.01%인데 우리는 0.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1% 정도까지로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예산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그동안 기울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말씀하신 대로 인력부족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저희가 관련부처에 제안을 할 때마다 기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을 먼저 보여라 하는 얘기가 항상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인력확보 노력을 배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건 위원** 예산처에서 대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대개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유재건 위원** 마치 북한과 미국이 말다툼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핵을 먼저 없애야 체제보장을 해 주겠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유재건 위원** 동시에 하는 것은 없고…… 좋습니다.

예산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예산구성의 내실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처의 얘기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2004년도 외교부 예산 7756억 5000만 원 중 사업비는 6026억 5000만 원으로 약 77%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는 2003년도 1644억 9000만 원에서 2004년에는 1729억 9000만 원으로 5.2%가 증가했습니다.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부분의 상승은 사업부문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급 가지고 시비 거는 고용주라든가 제3자는 인기를 잃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비 중심의 예산책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지금 대답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중에 계획과 이번에 이렇게 구성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현재 정원 1533명에 현원 1577명으로 44명이 오버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별도정원 96명에 현원 127명, 플러스 31명으로 총 75명의 초과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인건비 부족현상이 자꾸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건비 부족은 다른 사업예산에서 이용하거나 전용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사업예산의 왜곡을 유발하게 되는 기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직제정원에 맞게 현원을 유지하거나 현실에 부합되는 정원이 책정되도록 직제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즉답하실 수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건 위원** 벌써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준비한 질의를 못 해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몇 분이 이미 지적하셨지만 외교활동비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 이라크 재건 지원은 중장기적 계획아래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일단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요새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교안보연구원의 심각한 인건비 전용 문제, 연구원이 본연의 역할을 되찾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몇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曺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容甲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金容甲 委員** 金容甲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여론을 통합해서 나아가야 할 정부가 거꾸로 국민들의 갈등과 혼란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미 파병결정이 내려진 마당이라면 대미, 대이라크 외교문

제는 외교통상부가 담당을 하고 실질적인 파병규모와 파병성격 등에 대한 검토는 국방부가 전문적인 입장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일각에서는 전투병 파병하면 사퇴한다고 하고, NSC 사무차장은 비전투병 파병, 이삼천명 파병 등 무책임하게 사견을 공개함으로써 정부 내 갈등을 빚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파병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최근 이러한 정부 내 갈등에 대해서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국가적 혼란인 현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추가파병은 두 가지 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국익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며, 둘째는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요구와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일각과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보면 아직도 전쟁명분론에 매달려서 파병 자체에 부정적이고, 그러다보니 파병을 최소화해서 비전투병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병의 형식과 규모에 대한 외교부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규모와 성격의 부대를 보낸다면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추가파병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외교안보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외교정책의 총책임자인 외교통상부장관은 거꾸로 뒤로 밀려 있고 청와대와 NSC의 소수 인사들에 의해 의견이 주도되고 있고 마치 이들이 정책 결정을 다 하는 듯 보일 정도입니다.

청와대와 NSC 내부의 소위 진보그룹들은 파병결정 이전부터 외교안보라인이 편향돼 있다고 비난해 왔고 이제는 파병을 둘러싼 파워게임이라도 벌어진 듯한 양상입니다.

국가의 사활이 걸려 있을 수도 있는 중요한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처럼 주무부처가 위축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정책의 총책임자로서 장관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으시는지, 또 소위 민족파라고 불리는 일부 진보그룹에 의해 국가의 중요한 외교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이처럼 외교정책이 혼선을 빚는 것에 대해서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2차 시찰단이 가기에 앞서서 중동국장인가요, 발표에 따르면 KOTRA 직원을 공격한 사실과 대사관 직원이 얼마 전에 택시에서 이라크인에게 연행되어서 떠나라고 했다는 발표를 했는데 지나간 일을 그렇게 뒤늦게 발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이라크대사관 직원의 연행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발표시점으로부터 5, 6일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군 파병 결정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라크 내부의 상황들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金容甲 委員** 파병반대 분위기에 도움을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金容甲 委員** 그런데 KOTRA 문제는 오래 된 이야기이고 본 위원도 이라크에 들어가 보면 그 정도 위협은 약과입니다. 심지어 소위 불량한 이라크인에 의해서 돈도 강탈당하고 위협도 당하는 수가 흔히 있는데 마침 그 시점에 한 것이 상당히 의도된 발표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6자회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북한의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최근 북한이 중국의 설득에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동시행동 원칙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불참한다는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해도 북한의 동시행동 및 일괄타결 주장과 미국의 순차적 해법 사이에서 타결점을 찾아 가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체제보장 요구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접점을 찾기 힘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실상 우리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다소 북한 쪽에 경사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미국 정치권 일부에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태도를 일종의 배신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의 요구를 100%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정부가 좀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6자회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6자회담의 진행에 따라 우리 정부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6자회담이 결렬되었을 경우의 선택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6자회담이 결렬된다면 어쩔 수 없이 미·북관계는 악화될 것이고 한반도 전역에 긴장이 조성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에 설 것인가입니다. 지금처럼 미국과 북한의 중간에 서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민족이냐 혈맹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성급한 미국의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고 북한 역시 지속적으로 한 민족을 내세우면서 우리 국민들을 향한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체제냐 민족이냐의 선택 부분인데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단계에서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북한 체제보장이 궁극적으로 통일에 배치되는 것이고 우리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원칙과도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미국 측에 북한체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듯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방안인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적극적인 타결을 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북한 체제보장이 따라갈 것인데 이것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한반도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북한정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다자틀 내에서든 미국에 의해서든 북한 체제보장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북한을 합법정부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틀 전반이 바뀌어야 하고, 심지어 헌법까지 수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통일원칙 자체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지,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 체제보장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도대체 어떤 통일원칙을 세워갈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칠레 FTA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농업의 붕괴를 부르고 우리 농민을 나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한·칠레 FTA의 비준을 반대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비준을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첫째, 현재의 한·칠레 FTA는 당장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서 우리 산업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을 완전히 무너뜨리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한마디로 당장 먹을거리가 없다고 종자 내다 파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식량안보론까지 등장하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농업기반이 무너지고 만다면 이는 훨씬 큰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과거 소련의 붕괴과정만 보아도 공산독재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결국 식량이었습니다. 식량안보, 식량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업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마당에 오히려 농업을 천덕꾸러기로 인식하고 완전히 도외시하는 것은 결국 미래의 재앙을 부르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부문을 최대한 예외로 했다고 하지만 결국 앞으로 16년이 지나면 1080여 농업품목 모두의 관세가 철폐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 농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농업을 아예 포기하고 살 수 있습니까?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칠레 FTA는 강자만을 키워주고 약자는 짓밟는 반사회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농민들은 항상 약자의 위치

에 있었으며 산업화의 뒤안길에서 묵묵하게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도농 간 격차가 극심해지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모두가 도시로 몰려들 때에도 농업을 지켜왔던 농민들이 있었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안 우리의 좋은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경제구조 속에서 일방적으로 농촌이 발전에서 소외될 때에도 오로지 농업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일해 왔던 사람들이 오늘의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강요하면서 FTA를 추진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칠레 FTA로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자동차 팔고, 핸드폰 파는 대기업들입니다. 이처럼 대기업 중심의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농촌과 농민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한·칠레 FTA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정부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으로는 도저히 농민들의 피해를 감당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7년간 84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연간 1000억 남짓한 예산으로는 농가의 직접 피해를 보상하는 데도 부족합니다.

더욱이 저가의 칠레산 과일이 밀려들 경우 과수농가의 간접피해보상에는 턱도 없는 금액입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간접피해 추산금액 10년간 5860억 원도 사실상 대학교 한 곳에서 연구한 결과일 뿐이며 현재 농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접피해 규모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98년 12월 미국산 오렌지가 대량 수입되면서 우리 주요 과채류의 가격이 절반으로 폭락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칠레 FTA 결과로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에 한국의 사회적 후생, 즉 소셜 웰페어(Social Welfare)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포도와 배의 경우에 시설포도 생산농가와 배 생산농가의 소득은 354억 원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341억 원만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잉여는 오히려 13억 원이 감소됩니다.

키위 생산농가와 참외 생산농가의 소득도 191억 원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109억 원 증가에 그쳐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잉여는 82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한·칠레 FTA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기업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한·칠레 FTA 비준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 위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칠레 FTA만큼은 기필코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라도 한·칠레 FTA를 포기하고 새로운 무역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OICA 이라크 재건사업에 대해서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파병이 사실상 결정된 상황에서 KOICA의 이라크 재건 지원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의 반감을 줄이고 동시에 우리 군 활동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된 상황을 보면 비록 기간이 짧았다고는 해도 8월 말 현재 집행률이 14.3%에 불과하고 프로젝트사업이나 개발조사사업과 같은 큰 사업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집행률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군이 추가파병된다고 하면 이와 연계해서 우리 군 파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행계획을 새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KOICA나 외교부가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향후 국방부 등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KOICA의 내년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을 제외할 경우 올해보다 26.9% 증액되었고, 특히 올해 추경에 포함되었으나 내년에 쓰일 이라크 재건 지원비를 포함하면 내년도 협력사업비는 총액 171억을 넘어서 올해에 비해 약 2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예산이 이렇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상운영비는 오히려 26.6%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었던 인건비 부분은 다소 개선이 되었지만 이것도 사실상 이 정도 사업비를 감당하기에 불충분하고 경상운영비마저 감축되어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염려됩니다.

직원들의 충성심만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상운영비의 감축 사유를 밝히고 향후 사업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기로 하고, 재외동포재단을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수준 이하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3년 기준으로 보면 이사장 연봉이 59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은 서면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 또 중국대사관 탈북자대책에 대해서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曺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孟亨奎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孟亨奎 委員** 시간 재지 마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1분만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丁世鉉 통일부장관이 어제 통외통위에서 제주남북체육축전 승인과 북측 참가기관에의 220만 달러 지급에 대해서 국정감사 위증을 인정했습니다. 남북교류를 지도·감독해야 할 통일부가 거꾸로, 지금은 어느 당으로 갔는지 신당에 그냥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원웅 의원의 지시 내지는 부탁을 받아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위증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관과 관계국장을 관계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축전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남북관계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었고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만든 장본인인 김원웅 의원이 자숙하기는커녕 경솔한 언동으로 국회를 모독하고 있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김원웅 의원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북사업을 흠집 내려는 세력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사업내용을 일일이 알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통일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 그야말로 망발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해서 투명하고 건강한 남북관계를 유지해 줄 것을 일관되게 주문해 왔지 대북사업을 흠집 내려는 세력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는 또 한나라당만의 국회가 아닙니다. 김원웅 의원의 말은 그가 몸담고 있던 한나라당을 모독한 것은 물론이고 대북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는 통일부의 정책과 집행을 감시하는 국회의 권한을 부정하고 국회를 모독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최소한 통외통위 결의로 김원웅 의원이 통외통위에 나와 무슨 뜻으로 그런 소리를 했는지 해명하고 국회에 공개사과토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제주 남북축전이 어떤 경위로 교섭이 되었고, 또 어떻게 했길래 그런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曺雄奎** 국회법에 의해서 지금 孟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孟亨奎 委員**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이라크파병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라크파병을 결정하기에 앞서 대통령이 먼저 마음을 정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스스로가 국론분열을 부추긴 느낌이 있습니다.

盧 대통령은 파병을 결정하기 전에 여야협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파병을 결정하기 하루 전인 10월 17일 저녁에 4당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파병결정을 통고했습니다.

반면에 盧 대통령은 같은 날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파병국익론의 허구성, 파병 시 테러위험 노출 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나서는 이 소리, 저 사람 만나서는 저 소리, 盧武鉉 대통령은 10월 17일 하루 중에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국민과 야당 대표들에게 각각 다른 내용을 전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런 이중적 태도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제가 알고 있는 대통령님의 견해는 지금 현재 국민들의 안위 그리고 한미 간의 동맹관계, 국가이익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앞에 놓고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중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孟亨奎 委員** 생각과 고민은 그렇게 한 가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이 사람 만나서 하는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하는 얘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라크 추가 파병안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선 대통령이 파병의 구체적인 안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함구령까지 관련부서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자신이 흔들려서인지 정부의 영이 서지를 않습니다. 지난 10월 27일 NSC의 이종석 사무차장이 파병규모는 3000명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28일 외교부와 국방부 관련부서의 반발이 있으니까 29일에는 NSC 전략기획실장이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중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또 30일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백지상태 논의는 지난 18일 파병결정 당시 지침을 설명한 것이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파병규모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지난 29일 파병에 관해 마음을 정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민의 일단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대통령이 일단 파병 원칙을 정했다면 그다음에 규모와 시기, 성격 등 세부내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흔들리는 모습과 정부 내의 의사결정 시스템 혼란에 대한 장관의 생각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의사결정 시스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오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좀더 효율적인 의견 종합과 조정 과정 그리고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孟亨奎 委員** 솔직히 시인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정부 내에서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우리 통일외교통상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존재가 이라크 국가 재건에 꼭 필요하다고 이라크 국민들이 믿게 될 때 파병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파병의 성공 모델을 보여준 동티모르에 파견한 상록수 부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라크 파병부대를 편성해야만 이라크 재건과 민주정부 출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편성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측의 요구사항과 이라크의 현지사정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 내부의 상황전개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하면서 국민의 안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원칙론적인 말씀 이 외에 지금 현재는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孟亨奎 委員** 요즘 그 쪽에 자꾸 테러가 나고 하니까 솔직히 많이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전투병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월남전 파병을 연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요청할 때 전투병을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컴배트 포스(combat force)라고 그랬나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미국 측에서 전투병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안정화군이라고 'stabilization force'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孟亨奎 委員** 그러면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 치안유지군 또는 평화유지군 등등 이런 쪽으로 말을 쓰지 자꾸 전투병이라고 강조되는 것이 일부 세력에서는 보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휘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군의 주축은 현재로서는 공병이나 의무 등 민사요원인 만큼 이라크에 싸우러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테러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우리 군을 보호하고 또 주변의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임무를 할 수 있는 군대라는 의미의 적절한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처음 추가파병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과 유엔 관련국들에게 얘기해서 유엔의 평화유지군, 유엔의 이름을 가진 군대로 파병될 수 있도록 하면 국론분열과 관련되어서 우리나라가 편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 그러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벌여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관께서는 우리가 유엔상임이사국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니시에이팅(initiating)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물론 그렇지만 그러한 외교적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이었는데 어쨌든 유엔에서 이것을 승인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일부 중동 국가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반발 정도는 우리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는 것 아닌가, 정부는 우선적으로 이라크와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현지 대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사들을 파견해서 우리의 파병목적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결코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중동의 안정과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보편적인 외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분명한 입장을 중동 국가들에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 지시가 있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孟亨奎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은 6자회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30일 북한이 6자회담 참가 용의를 밝힘으로서 관련국 간 사전 외교교섭이 빨라지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런데 차기 회담까지는 북미 간의 입장차라는 복병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북한은 핵폐기와 대북 안전보장 등 핵문제 해결 요소가 관련국 간에 동시병행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선 핵폐기 후 반대급부 제공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능성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유연화된 양측의 입장을 고려할 때 외교적인 노력을 더욱 더 기울이는 경우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孟亨奎 委員**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북한이 지난 7월 8일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발언했고 10월 2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추출한 플루토늄을 핵억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도 변경했다고 얘기했습니다. 10월 26일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북한 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때가 되면 핵억지력의 물리적 공개조치를 취할 것이다, 10월 18일에는 역시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핵억지력 강화는 때가 되면 실물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적절한 때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러한 북한 측의 강한 레토릭(rhetoric)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연한 자세를 보였던 것처럼 앞으로 2차 6자회담이 전개되는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희망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孟亨奎 委員**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죽 대북외교를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에 기대하는 외교를 계속 해 오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결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외교적으로 대단히 노회하고 브링크맨십(brinkmanship) 외교에 아주 능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해 주면 저 사람도 잘 해 줄 것이다, 그것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정부 전체가 북한의 선의에 너무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점을 지적해 두고 넘어갑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북한이 이렇게 핵 관련 발언 수위를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폐연료봉 8000개 중 현재 2500개 가량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1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핵 재처리를 통해서 핵무기 1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실을 미국이 알고도 무시해 온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는 쪽으로 전환된 것은 아닌가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여러 가지 추론이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핵 능력과 핵무기 보유 상태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孟亨奎 委員** 지난 10월 29일 북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이 북한은 미국에 대한 상호불가침조약 체결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정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북한 외무성 담화에서는 불가침조약 부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화된 태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북한 입장의 전면적인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孟亨奎 委員**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북한이 체결 요구를 철회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미국이 제안한 다자 간 서면불가침보장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2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미국은 쌍무적인 불가침조약을 채택하는 데로 나와야 한다, 채택하는 데로 나와야 한다는 것은 조약을 체택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미국은 조·미 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우리를 주적으로 하는 남조선·미국 호상 방위조약이 무용지물로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남조선·미국 호상 방위조약의 무효화는 그대로 남조선 주둔 미군 철수와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불가침 요구는 단순한 불가침조약의 체결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무효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동시에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불가침조약 체결 요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의 그런 의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북한의 불가침조약 체결 주장과 관련해서는 키신저 박사 등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있는 것으로 지적한 바가 있고 바로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 가면서 미국 측에서도 안전 보장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미 간에 충분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孟亨奎 委員** 시간이 다 돼서 우선 한일 간의 FTA는 서두르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칠레 FTA의 체결은 장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해 둡니다.

국군포로문제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특히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을 과소계상한 문제 등등 몇 가지를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曺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韓和甲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韓和甲 委員** 6자회담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독 의원친선협회 독일 측 공동회장인 코시크 의원을 만났습니다. 물론 외교부 장관께서도 만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의 김영남을 만났고 인민무력부 부부장도 만났는데 6자회담에 대해서 북한의 군부도 북한 외무성의 견해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6자회담에 있어서 북한이 불가침조약 요구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의견 차이는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북한은 동시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북한의 선 핵포기 후에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6자회담이나 북한 핵문제를 가지고 정책 조율을 했을 때 북한이 불가침조약 주장을 철회했을 경우에 대비한, 북한안에 대한 미국의 대안 또는 일본 한국 미국의 대안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이행의 순서문제와 관

련해서 미국 정부 측에서는 북한 측이 핵을 폐기한 다음에야만 미국 측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韓和甲 委員** 그러면 원래 미국의 주장에 변화가 있다는 말이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시기적으로 봐서 몇 달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변화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韓和甲 委員** 盧武鉉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라크 파병문제와 북한 핵문제를 연계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일본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책 조율을 할 때 그러한 북한문제와 관련지은 이라크 파병문제를 지렛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는가 또 우리 정부의 주장이 미국 또는 일본의 주장과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이라크 파병문제는 안보현안 또 다른 어떤 현안과도 연계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 측과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안보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국민과 정부의 6자회담 성사에 관한 간절한 희망을 전달했고 그러한 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고려 사항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는 얘기는 했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적은 없습니다.

**○韓和甲 委員**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대통령의 그러한 연계 취지는 지금 장관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이었다는 말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韓和甲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 일본, 우리가 또 정책 조율의 기회가 있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韓和甲 委員** 그때 정부에서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고 답을 주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미국이 원래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결국 불가침조약을 북한에서 철회했다 하더라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회복에는 보탬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미국의 켈리 차관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정책이 북한이 모든 것을 먼저 해야 그다음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폐기 용의를 선언하는 단계, 그다음에 폐기에 진입하는 단계, 또 그다음 단계, 또 마지막으로 폐기를 완료하는 그런 단계 이런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매 단계에 상응하는 조치를 그때그때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듯이 북한의 선조치를 절대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韓和甲 委員** 그렇다면 미국이나 일본하고 북한 핵문제를 가지고 정책 조율을 할 때 과거에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일괄타결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을 우리의 그러한 페이스로 끌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인 안을 이미 제시했고 또 그런 안에 따라서 협상타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미·일 간에 조정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韓和甲 委員**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그것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사상 우리나라 문제를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당사자로서 참여해서 함께 결정했던 예가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6·25전쟁 휴전협정도 그렇고 얄타회담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는데 북한 핵문제만은 그래도 다자구도를 주장한 미국의 구도가 성사되고 보니까 우리가 당사자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한국 외교가 햇볕정책 이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자기 목소리를 찾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 방미 이후 소위 주한미군 2사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 국방성에서 관계관들이 서울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받아서 그 후속조치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미국사람들이 그냥 갔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

기했느냐? 한국에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주한미군 2사단 문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갔다는 말을 미국통이라는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그러는데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라크 파병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한미 간 전개과정을 보면 우리는 국내에서 보내니, 안 보내니 시끄럽지만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보내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듣는 그런 경우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APEC 가기 전에 부시 대통령이 일본이나 필리핀을 다 방문하고 갔는데 우리는 그 많은 군대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오지 않았어요. 또 그 사이 국내 신문보도에 대통령 친서가 부시 대통령한테 갔다든지 또는 APEC에 가서 파병규모가 결정되었다든지 이러니까 결국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고맙다는 말도 못 듣고 외교적인 성과도 못 거두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이런 인상을 준다 이 말입니다. 파병할 바에는 차라리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미국이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을 끌어내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나 다른 데서 그런 외교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이 盧武鉉 대통령을 만나서 부시가 자기 말 들어 주면 미국의 친구이고 내 친구이다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국내에서 미국하고 관계된 얘기를 거론할 때부터 미국은 한국의 盧武鉉 대통령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 전제 위에서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외교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파병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교섭이나 외교는 거의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면서도 결정날 때마다 고맙다는 얘기 못 듣고 미국에 끌려서 결정하는 이런 인상을 줌으로써 국민들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외교통상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미국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당당히 받아내고 우리가 미국을 도와준다는 자세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외교를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정상회담을 주무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갔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은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고 또 공동성명 문안도 한미 간에 철저하게 협의를 통해서 준비가 되었고 모든 것이 사전에 조율되어 APEC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서울에 안 들른 문제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 행정부에서 1년 전부터 방문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여러 나라를 돌면서 기착지를 찾다보니까 어느 나라에 들러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일본이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미국 측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일본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일본에 올 때 한국에도 들러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어떤 예의를 갖춘 회담을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한국에 오는 대신 방콕에서 조찬식사를 하면서 한 시간 동안 회의를 했고 또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회담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공동성명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조찬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과정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몇 번씩이나 부시 대통령이 盧武鉉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거기에서 부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대북 안전보장안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盧武鉉 대통령의 외교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북한이 거기에 화답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 부시 행정부의 그런 제안을 우리가 검토하고 6자회담에 나오겠다'는 식으로까지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韓和甲 委員** 그런 정상회담의 성과가 있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 성과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 일본의 고이즈미처럼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에 간 적은 없잖아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되는 것인데, 어

쨌든 아시아 순방하면서 지금까지,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 일본까지 오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가면서 한국에 안 왔던 예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파병문제 또는 공식적인 라인을 통하지 않고 들려오는 미국과 한국과의 마찰음 이런 것하고 결부되어서 설왕설래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曺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柳興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柳興洙 委員**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께서는 존경하는 韓和甲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번 파병 결정과정을 볼 때는 정부가 늘 그렇게 주장하던 자주외교에 비해 자주외교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생색도 나지 않는 결정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羅鍾一 특보가 갑작스럽게 미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韓昇洲 대사가 급거 귀국하게 된 것은 그런 문제와 관련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왜 그렇게 되었었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韓昇洲 대사의 서울방문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지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사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선을 해 가지고 한국에 들를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柳興洙 委員** 그 현지 분위기 속에는 파병을 위한 미국 조야의 분위기, 미국 정부의 분위기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지에서 대사로서, 대체적으로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그런 일들이 관례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현지 대사가 와서 상황을 전달하고 했습니다.

**○柳興洙 委員** 羅鍾一 보좌관이 파병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쾌감이랄까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갔다는 그 점은 어때요?

(曺雄奎 간사, 徐廷和 위원장과 사회교대)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柳興洙 委員** 전혀 친서도 안 가져갔어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친서는 갖고 갔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柳興洙 委員** 전혀 아닙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柳興洙 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믿도록 하지요.

어떻게 되었든 파병문제는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파병문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회의 대정부질문 때, 장관께서는 APEC 회의에 대통령을 수행해서 안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도 그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익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국론을 모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는 많지만 저는 파병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최소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에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모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많은 것보다 작은 것이 좋고, 또 가능하면 전투병의 수가, 전투병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치안유지군이라고 할 때 그런 등등은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 국익 아니겠습니까? 국익을 최대화하는 문제, 파병에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 정부가 지금부터 주력해야 될 점이 그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柳興洙 委員** 그러면 파병에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뭡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국익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국가이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해 나아가야 될 외교목표와 관련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미동맹관계가 중요한데 그 한미동맹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다른 맥락에서 경제적 실익이나 이런 점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한

미관계라는 측면이 있겠고, 또 국가이익이라는 차원과 다른 맥락에서 한국의 외교가 이제는 국력 12위의 국가로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평화의 문제, 인권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어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파병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柳興洙 委員**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대개 장관이 이야기하신 대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이 큰 국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치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한미관계 강화, 동맹, 한반도의 안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이 신속히 해결된다든가 하는 것도 파병에서 올 수 있는 국익과 연결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북한 핵문제와 파병이 연계되느냐 하고 질문하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다 부인을 하는데 왜 부인합니까? 굳이 부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국익 아닙니까?

북한 핵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지요. 장관님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했다고 뉴욕타임스지에 보도도 나왔는데 나중에 부인을 했습디다. 魏聖洛 북미국장인가 그분이 북한 핵문제와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 설명을 했던데 나는 그것을 왜 그렇게 놀라면서 부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대해서 파병을 우리도 하는데 가게 되면 우리 군대가 줄어들어 북한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한반도의 안전이 매우 중요한데 북한 핵문제가 제일 큰 것 아니냐, 빨리 6자회담이 성사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왜 연계 못 시킵니까? 연계 안 하는 것이 잘못이지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슈는 한미 간에 아무리 협력이 되어도 북한이 거기에 호응해 나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상대가 있는 게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의 상황과는 성격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柳興洙 委員** 아니지요. 정부가 그 말을 하면 꺼리는 이유가 파병해 줄 테니 미국 너희가 북한에 대해서 조금 양보해라, 양보하라는 말은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좀 유연하게 나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한미공조보다도 남북공조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일부 사람들이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것을 걱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대북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양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유연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면서 파병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렇게 했지요? 안 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연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柳興洙 委員** 아까 답변하는데 그런 고려의 요소는 있지만 연계는 안 했다 이랬는데 그 고려의 요소라는 것이 바로 연계지요.

좋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국익은 파병을 완전히 결정함으로써 상당히 한미동맹관계가 강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가 고맙게 이야기하고, 어제 鄭大哲 위원의 표현에 의하면 'I talk to him'이 아니고 'I talk with him'이라고 하는 정도의 친근감을 보였다고 하는데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부시가 직접 언급했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미관계는 파병결정으로 이미 얻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국익은 경제적인 측면을 굉장히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은 통상업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니까요. 물론 다른 경제부처와도 연관이 되겠지만 이라크의 전후복구사업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정부는 예측을 합니까? 아직 장관은 모르시겠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柳興洙 委員** 대개 500억 불에서 1000억 불 정도의 시장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 전후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드리드회의에서 이라크에 차관으로 주기로 한 것이 350억 불인가로 결정되었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330억 불인가……

**○柳興洙 委員** 350억 불로 내가 기억하는데 여하튼 이런 등등해서 이라크 전후복구시장에 우리 기업이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제일 큰 국익입니다. 이제부터 고려되어야 될 국익이에요. 아까 말한 한미동맹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익을 어떻게 달성해 나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라크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17억불에 달하는 채권,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 17억 불이라는 돈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런 등등의 국익을 확보하는 문제를 이제는 외교통상부보다도 정부차원에서, 내가 총리에게도 똑같이 대정부질문 때 질문을 했습니다. 총리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만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柳興洙 委員**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옛날의 월남 특수와 같은 것을 누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막연하게 이라크 파병에서 생각하는 국익이라는 것은, 국민이 생각하는 기대도 그런 경제적인 국익입니다. 경제적인 실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무 실익이 보장되지 않는 속에서 끝나고 만다면 파병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T/F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협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미협상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지금 이라크와 관련해 가지고……

**○柳興洙 委員** 파병 규모,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없겠지요? 저는 T/F와 같은 것을 만드는 동시에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진행해 나간다 또 이라크에는 시장도 있지만 석유개발권 문제도 새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데 어떻게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T/F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니까 계속 이 문제는 제가 팔로 업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꼭 준비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孟亨奎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대정부질문 때 질의를 했습니다. 아랍권의 정서를 생각해서 사전에 이라크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후세인 제거한 것에 대해서는 아랍권이 다 반대가 없겠지만 역시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선무하기 위한 외교활동이 사전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나가서 특사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간에 국회 차원의 특사도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이라크 파병의 의의라든가 불가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는 외교활동을 아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꼭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柳興洙 委員** 미국이 지금 이라크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이 점령군이라는 인상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 군이 파병이 되었을 경우에도 점령군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대책 같은 것이 좀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 면과 관련해서 동티모르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柳興洙 委員** 군을 교육시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보니까 여기 KOICA 총재께서도 와 앉아 계시지만 KOICA 요원들을 많이 파견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 인상이 좋은 사업을 많이 파병되는 주둔지역에다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금 내가 질의하면서 장관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느끼는 인상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준비나 대책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인상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착수해 가지고, 파병은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정상회의가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柳興洙 委員** 서울에서 개최됩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柳興洙 委員**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게 되어 있는 것 뿐이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柳興洙 委員** 결정된 지가 3년여 되어서 준비단도 발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徐廷和** 수고하셨습니다.

曺雄奎 위원님!

**○曺雄奎 委員** 우선 일본인 변호사 후세다쯔지 씨에 대해서 우리 보훈처가 건국훈장을 수여할 검토를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도왔고 독립투사들을 도와 일본 법정에서 독립투사들을 위한 변호를 한 분인데 혹시 장관께서 후세다쯔지 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曺雄奎 委員**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국가보훈처가 건국훈장수여를 결정하고 외교통상부에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이 수여를 지금 시점에서는 반대한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曺雄奎 委員** 우선 이분의 한국 독립운동을 도운 모든 노력을 외교부는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아태국장 주재로 검토를 했습니다.

**○曺雄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또 어떤 역할을 하였느냐 하면 우선 3·1독립운동이 있게 만든 2·8독립선언에 참여한 한국유학생들의 변호를 2심부터 맡아서 변론을 하셨는데 "배우는 사람으로서 조선학생이 조선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재판관이 이를 내란음모라는 중죄로 다스린다면 일본은 스스로 무법·야만 국가를 자인하는 것이며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하고 변론하였으며 또 우리 유학생들이 내란음모죄 대신 출판법 위반으로 경미한 형을 선고받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운 분이십니다. 또 이분의 활약이 국내에 알려짐으로써 기미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는 기여를 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일본천황 암살혐의로 구속된 독립운동가 박열 사건, 1923년이고 또 1924년 동양척식회사의 농지수탈 고소사건, 이때도 이분은 목숨을 걸고 조선독립운동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조선총독부의 감시 속에서도 일본의 위정자들에게 분노한다며 도쿄에서 열린 조선유학생 주최 조선총독부 비판 연설회에서 열변을 토하다 변호사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비합법적 사회운동에 참여 선동하였다는 죄목으로 세 차례나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하고 재판에 회부되었고, 조선독립운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는 논문을 발표하여 구속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옥고를 치렀다고도 합니다.

또한 조선과 중국 같은 일류문화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은 야만행위다라고 일제의 식민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일제의 심장부인 동경 한복판에서 양심과 정의에 따라 일제와 투쟁한 열사였습니다.

이러한 반일제 투쟁으로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셋째 아들은 태평양전쟁의 참전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다 옥사하는 등 전 가족이 탄압과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외교통상부는 알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까? 좀 말씀해 보세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아태국장이 그런 사항들도 다 검토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曺雄奎 委員** 외교부가 통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지난 국감 때도 모 위원께서 이 문제를 질의하셨을 때 답변했습니다마는 다음과 같아요.

"동 건은 금후 전반적인 한일관계 및 국내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됨" 이런 의견이 외교부에서 보훈처에 감으로써 보훈처는 이것이 외교문제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훈장 수여를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만큼 우리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가족을 희생시켜 가면서 한 분이 몇 명 있나 할 때 극소수였습니다. 이런 분에게 50년이 지난 이 때에, 특히 보다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이런 분의 공로를 숭모하고 또 국가보훈처가 정한 대로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국가가 응당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외교부가 반대하는 이유를 아까 제가 인용한 대로 '금후 전반적인 한일관계 및 국내 분위기'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답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도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외교통상부 실무자들의 입장은 후세 변호사의 공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마는 일제하에서 우리 독립

운동을 지원한 일본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曺雄奎 委員** 이것 보세요. 제가 보기에 이분의 기여도라든가 이분의 헌신적인 공헌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객관적으로 충분하고 엄격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럴 경우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는 의견제시를 외교통상부에 물은 것이 의견제시 요구의 주 이유였다고 생각하는데, 보훈처가 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에 대해서 외교부가 또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만 주는 것이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뭔가 적절치 못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쨌든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한 사람의 진정한 벗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처럼 자기 목숨을 던져서 자기 정부, 자기 국가에 저항하면서 싸우신 분에게 훈장을 주자고 정부기관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시하라 동경지사의 망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나, 정부가 왜 좀더 적극적으로 적시에 이런 행동을 못 하나, 뭘 심각하게 검토한다면서 보훈처가 결정해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서 못 하게 하는 이번 외교부의 판단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재고해 볼 생각 있으세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曺雄奎 委員** 재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분이 조선독립운동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이 2월 8일 독립선언기념일인데, 내년 2월 8일이 아마 이분에게 이런 훈장을 수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하는 것인데,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3년간 9차례에 걸친 심사와 토론 끝에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3년 동안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습니까?

나는 외교적으로도 이런 것은 응당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장관께서 이것을 재고하셔 가지고 내년 2월 8일을 기해서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제가 지난번의 검토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曺雄奎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장관께서는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인 흐름의 맥락에서 볼 때 다소 무리가 있었던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로 나가는 방법으로서 의미가 있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曺雄奎 委員** 햇볕정책의 잘못된 방법,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많은 국민이 비판하는 퍼주기였다, 끌려다니기였다, 주권국가의 모습이 상실된 구차스러운 애걸하는 외교였다, 이런 평가로 인해서 국익에 엄청 손실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남북한 간의 대결구도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큰 긍정적인 공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曺雄奎 委員** 문제는 지금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기여가 있었다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긴장완화라든가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북한의 대남정책을 분석해 볼 때는 우리의 남북교류협력 정책과는 별개로 그것은 경제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들로부터 얻어가기 위해서 취한 형식적인 태도이고 적화통일 야욕, 대남 교두보 확립, 미군 철수, 이런 구체적인 자기들의 허황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송두율 교수의 귀국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소위 노동당 3청사의 하나인 대외연락부라든가 작전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대남공작의 일환이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면 지금 장관께서 한 햇볕정책의 평가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가 너무 피상적으로 자기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평가가 아닌가, 우선 盧武鉉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번영정책이라고 그랬는데 햇볕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햇볕정책의 기본정신을 계승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은 말씀드릴 수 있

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가 시장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더욱 더 진전되어야 되겠다는 점 그리고 남북한 간의 관계가 경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안보 내지는 군사 차원에 있어서의 길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되겠다는 점들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曺雄奎 委員** 그러면 지금 정부가 대북정책을 그런 기조 위에서 추진하는 데 미국의 이해나 협조가 필요합니까? 미국의 이해나 협조가 없이도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확신을 갖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미국의 이해가 필요하고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의 평화 번영정책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曺雄奎 委員**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이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국무성의 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도널드 카이저라는 분이 있다는 것은 아시는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알고 있습니다.

**○曺雄奎 委員** 미주판 신문인데, 그분은 북핵문제 해결특사로서 많은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지난 10월 20일 저녁에 발티모어 의회 외무위 주최 강연회에 참석해서 강연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盧武鉉 현 정부도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미 정몽헌 씨의 죽음 등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분은 국무성의 한반도 문제 관련 중요 위치에 있는 분으로 공식적인 발언이에요.

장관께서 지금 부시 행정부의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부시를 대신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 정부의 인식과 평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시겠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도널드 카이저라는 사람은 제가 회의 참석할 때 배석했던 사람으로서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미국의 대북정책이랄지 대한정책을 대변할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미 간에 대통령 이름으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두 번씩이나 또 파월장관의 입을 통해 가지고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이미 몇 번씩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曺雄奎 委員** 장관께서 그것은 우리 정부의 한미동맹관계를 소중히 한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취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때와 미 행정부의 고위층이라든가 의회지도자 혹은 한국문제 전문가들과 사적으로 만나 얘기할 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들의 입장 표명은 다릅니다.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말에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신뢰관계가 있다, 협력이 잘 된다, 우리 정책을 그들이 믿고 지지한다고 생각했다가는 어느 날 아침 불현듯이 엄청나게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내면에 갖고 있는, 대외적으로 한미동맹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얘기와 과연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든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진정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방파제를 쳐 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한미공조를 공고화해야 될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듣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두 철로가 접점 없이 달리는 정책이다, 그러면서 공조라는 말을 강조하는데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얘기인가 느낄 수 있어요.

서로 접점을 찾으세요. 미국도 반보 들어오고 한국도 반보 움직여서 접점을 찾아서 명실공히 북한이 느낄 수 있는 한미공조 정책으로 대북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세요. 지금 외교라는 것이 너무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그저 한미동맹이라는 지붕 밑에서 마지못해 웃음 짓는 관계, 이것은 본질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카이저란 차관보의 위치에 대해서 장관께서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셨지만 이분이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말하는 가운데 얘기한 거니까 나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의하셔 가지고 한미관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徐廷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일문일답으로 답변이 대부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 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들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廷和 金雲龍 朴源弘 金鍾河 유재건 韓和甲 金容甲 孟亨奎 정대철 그리고 曺雄奎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외교통상부 소관 2004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의 증감 규모 등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이 안건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성실히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산회 직후에 소회의실에서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

**○出席委員(17人)**

| | | | |
|---|---|---|---|
| 金德龍 | 金容甲 | 金雲龍 | 金鍾河 |
| 金宗鎬 | 孟亨奎 | 朴源弘 | 徐廷和 |
| 유재건 | 柳興洙 | 이부영 | 이인제 |
| 정대철 | 曺雄奎 | 秋美愛 | 河舜鳳 |
| 韓和甲 | | | |

**○出席專門委員**

| | |
|---|---|
| 수석전문위원 | 姜長錫 |
| 전문위원 | 金容九 |

**○政府參席者**

외교통상부

| | |
|---|---|
| 장관 | 尹永寬 |
| 기획관리실장 | 曺永載 |
| 의전장 | 崔禎鎰 |
| 외교정책실장 | 李先鎭 |
| 통상교섭조정관 | 金鉉宗 |
| 중남미국장 | 申崇澈 |
| 문화외교국장 | 朴興信 |
| 재외국민영사국장 | 金旭 |
| 다자통상국장 | 安豪榮 |
| 지역통상국장 | 趙兌烈 |
| 국제경제국장 | 鄭來權 |
| 감사관 | 朴聖雄 |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부장 | 全海鎭 |

**○其他參席者**

한국국제협력단

| | |
|---|---|
| 총재 | 金錫鉉 |
| 총무기획이사 | 金昌燁 |
| 개발사업이사 | 李炯悳 |
| 인력사업이사 | 金相泰 |

재외동포재단

| | |
|---|---|
| 기획이사 | 李準日 |